**[수신]**

**4장. 금전신탁**

1. ( )은/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그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정한 자 또는 설정한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이전받은 재산을 관리 및 운용, 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 )은/는 타인을 신뢰하여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이며, ( )은/는 위탁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서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아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은/는 신탁을 통해 관리되는 재산과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은/는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여 운용한 뒤 신탁종료 시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신탁이며, ( )은/는 금전이 아닌 금전채권,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수탁하여 신탁계약목적에 따라 관리, 처분, 운용한 후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4. ( )도 수탁자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 )을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5. ( )란 2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하고 모은 자금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 )은/는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로 분류한다.

7. 특수한 형태의 펀드는 ( ) 등이 있다.

8. 펀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등을 지켜야 한다. (3가지)

**1절. 신탁업무 개요: 1. 신탁 총론 : 1-1. 신탁의 의의**

1. 신탁이라는 법률 관계가 TJDFLQ하려면 ( ), ( )이라는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2. ( T / F ) 신탁은 법률 행위인 ‘신탁 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유언 또는 신탁선언에 의하여 신탁은 성립될 수 없다.

3.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재산은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수탁자 스스로가 위탁자가 되어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는 ( )도 가능하다.

4. ( )가 수익자를 지정하며,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 또는 제3자다.

5. From whom to whom? 신탁계약체결(운용방법 지시) 및 신탁재산 이전

6. From whom to whom?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신탁업무 수행

7. From whom to whom? 신탁이익 지급

**1절. 신탁업무 개요: 1. 신탁 총론 : 1-2. 신탁의 특징**

1. 신탁은 타인에 의한 재산관리, 처분을 위한 법제도의 하나로서 재산권이 위탁자에 의해 수탁자에게로 이전 또는 처분되어서 ( )가 그 명의인이 된다.

**2. 다음 중 신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권이 위탁자에 의해 수탁자에게로 이전 또는 처분 되어서 수탁자가 그 명의인이 된다.  
2) 수탁자 스스로 신탁재산상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3) 신탁재산은 법인격은 없으나 수탁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4)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시가 가능하다.**

3. ( T / F )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판 또는 권리능력도 포함하여 관리, 처분권자가 된다.

4. ( T / F )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시가 가능하다.

5. ( T / F ) 위탁자 스스로 신탁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와의 권리, 의무는 신탁재산의 관리기관인 ( )에게 귀속한다. ( )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는다.

7. ( T / F ) 신탁재산은 법인격이 있다.

8. ( T / F ) 신탁재산은 수탁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9. ( T / F ) 수탁자의 사망, 사임 등의 경우에는 신탁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10. 수탁자가 신탁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일정한 경우에 수익자 등에게 ( )이 인정되므로 신탁관계는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 간의 단순한 채권, 채무관계는 아니다.

11. ( T / F ) 수탁자 스스로 신탁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절. 신탁업무 개요: 1. 신탁 총론 : 1-3. 신탁의 관계인**

1. ( )는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며 신탁행위의 당사자이다.

2. ( )는 일정한 신탁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기 위한 재산출연자의 지위로 주로 신탁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3. ( )는 신탁의 당사자이다.

4. ( )는 신탁행위를 무효로 주장하거나 신탁행위를 취소할 수 ( ), 유언신탁의 경우에는 ( )이 그 지위를 갖는다.

5. 신탁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신탁재산은 ( )에게 귀속되고 신탁종료 시에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 또는 ( )에게 귀속된다.

6. 위탁자의 신탁행위 당사자 능력은 ( )에 따르는데, 유언신탁은 위탁자의 행위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유언능력이 있으면 되므로 만( )세 이상인 자는 무능력자이더라도 위탁자가 될 수 있다.

7. ( T / F ) 법인도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의해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탁행위를 할 수 있다.

8. 위탁자는 신탁에 대한 감독권자의 지위에서 수탁자 ( )에 대한 동의권, 수탁자의 ( )에 대한 동의권 및 해임청구권, 신수탁자 ( )에 대한 동의권 및 선임청구권, 신탁재산의 ( ) 등에 대한 이의권, 서류의 열람/복사권 및 신탁사무의 처리 및 계산에 관한 설명 요구권, 수탁자의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추급권, 수탁자의 보수변경청구권, 신탁의 ( )에 대한 동의권 및 변경청구권, 신탁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승인권, 신탁의 종료에 대한 동의권 및 종료명령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다.

9. ( T / F ) 위탁자는 공익적인 권리 외에 신탁이 종료한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권도 있다.

10. ( )의 의무로서는 보수지급의무 외 추가적 출연의무 등이 있으며 신탁행위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11. ( T / F ) 영업신탁에서는 수탁자는 신탁회사나 신탁을 겸영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12. ( T / F ) 수탁자에게는 권리능력뿐만 아니라 행위능력도 요구된다.

13. ( T / F ) 행위무능력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4. ( T / F )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탁자가 될 수 있다.

15. ( T / F )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있다.

16. ( T / F )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7. ( )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다.

18. ( )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19. ( T / F ) 수탁자는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20. 수탁자의 ( )로서는 비용상환청구권, 보수청구권, 신탁관리인 선임요구권, 신탁재산 관리방법 변경 청구권,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이의권 등이 있다.

21. 수탁자의 ( )로서는 수탁자의 선관의무, 자기집행의무, 장부 등 서류의 작성/보존 및 비치의무, 서류의 열람 등,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충실의무, 법인의 이사의 책임의무, 유한책임,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이 있다.

22. ( T / F ) 수익자도 신탁행위의 당사자이다.

23. ( T / F ) ‘신탁법’에서는 수익자의 능력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 바가 없다.

24. ( T / F )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어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25. ( T / F ) 신탁설정 해위 당시에 수익자가 반드시 특정되거나 존재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26. 수익자에는 ( )와 ( )가 있다.

27. 수익자는 ( )을/를 갖게 되는데 ( )은/는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를 의미한다.

28. ( T / F )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양도할 수 없다.

29. ( T / F ) 수익자는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30. 수익자는 여러 가지 이익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 )과 신탁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수탁자를 감시/감독하는 수탁자 감독권한으로 신탁의무 ( ), 수탁자에 대한 ( ), ( ) 및 서류의 열람 등 ( ), ( ) 및 ( ) 등이 있다.

31. 수익자는 일정한 경우 신탁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 ), 신탁재산에 대한 ( ), ( ) 등이 있다.

32. 수익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신탁운영의 ( )이 있는데, 신탁위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여부, 신탁의 변경, 신탁의 종료 등이 해당된다.

33. ( T / F )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별도의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수익권이 발생한 시점에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34.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수익권의 내용, 수익권 포기의 기한 등의 제한 없이 수익권을 포기할 수 ( ).

35. 수익권의 포기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 )에 대하여 수익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6. 수익권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 )하거나 ( )을 설정할 수 있다.

37. ( T / F )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8. ( T / F )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9. 수익자는 ( ) 비용과 신탁재산에 대한 ( ) 의무를 부담한다.

40. ( )(이)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탁자의 신탁사무의 처리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41. ( T / F )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 감독을 위하여, 수익자가 존재하더라도 수익자가 행위 무능력자이거나 그 밖에 사유로 수탁자에게 적절한 감독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수익자가 다수인 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용이할 수 있도록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다.

42. 신탁관리인 선임방법 중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하고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 )의 경우 신탁이 설정된 처음부터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 )의 경우에는 법원이 아니라 ( )이 신탁관리임을 선임한다.

43. ( T / F ) 신탁관리인 선임방법 중 수익자가 존재하더라도 수익자가 행위 무능력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게 적절한 감독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수익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등 이해관계인의 선임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을 결정할 수 있고,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44. 신탁관리인 선임방법 중 수익자가 다수인 신탁의 경우 수익자의 의사결정 편의를 위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선임을 강제하거나 법원이 선임에 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익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선임한다.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에 따라 수익자 ( 전원 / 일부 )의 동의, 신탁행위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또는 수익자집회의 결의에 의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종류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다수의 종류수익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신탁관리임을 선임할수 있다.

45. ( T / F )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46. ( T / F )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자기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

47. ( T / F )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권한 전부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48. ( T / F )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수령할 권한, 신탁의 종료명령 청구권 또는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권한 등 행사할 수 있다.

49. ( T / F ) 신탁관리인의 의무로는 수탁자에 대한 통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50. ( )은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의 신탁사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 )의 선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 또한 같다.

51. ( T / F ) 신탁재산관리인은 임시적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52.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 )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3.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즉시 (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4. ( T / F ) 법원은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신탁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55. ( T / F ) 수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와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수탁자가 사임허가 결정 또는 해임이 결정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6. ( T / F ) 위의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은 소극적 권한만 인정되므로 신탁재산의 ‘보관’만 할 수 있을 뿐 처분/운용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는 할 수 없다.

57. ( T / F ) 신탁재산관리인은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갖고 있으며, 선임의 통지 의무를 부담한다.

**1절. 신탁업무 개요: 1. 신탁 총론 : 1-4. 신탁의 기본원칙**

1. 신탁의 기본원칙 5가지를 말하시오.

2.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재산이 법률상 형식적으로 (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 )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따라서 수탁자는 자신의 재산인 고유재산은 물론, 다른 신탁재산과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수탁자의 ( )라고 한다.

3. 신탁재산과 ( )간의 ( )관리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혼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손실 또는 수익자의 이익의 침해 등을 방지하고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4. ( )간의 ( )관리 : 신탁재산은 신탁계약 건별로 신탁계약의 목적이 다르고 신탁내용도 또한 다르므로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신탁의 이익도 다르다. 또한 신탁은 ( )배당을 하게 되어 있어 신탁재산을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신탁건별, 신탁 재산별로 발생된 수익을 구분 계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탁자가 같다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계약 건별로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 T / F ) 위탁자가 같을 경우 2개 이상의 신탁 계약에 대하여 건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6. ( )의 원칙이란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신탁재산에 귀속한다는 원칙이다.

7. ( T / F ) 신탁은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하고 신탁을 통해 발생하느 ㄴ이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준다.

8. ( T / F ) 법률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신탁재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이는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는 이것을 보전하여 주지는 않는다.

9. ( )의 경우 고객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원본 또는 이익을 보전할 수 있다. 과거에 판매되었던 연금신탁, 퇴직신탁, 개인연금신탁이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원금보장상품은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최고 ( )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10. ( T / F ) 신탁은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신탁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11. 수탁자는 실적배당의 원칙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생긴 총수익에서 제 비용과 신탁보수를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때 신탁금과 기간에 의한 총적수에 따라 평등하고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 )의 원칙이라고 한다.

12. ( )의 원칙은 주로 여러 위탁자의 신탁금을 한데 모아 함께 운용하는 ( )의 이익 배당 시 적용된다.

13.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탁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며, 신탁목적에 따라 주의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여, 수익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향수하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무슨 원칙이라 하는가?

14. 수익자의 재산인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수유하게 되므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일반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추가하여 수탁자에게 특별히 (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란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항상 수익자에게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금지,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탁자의 각 수익자에 대한 공평의무,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15. ( T / F )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수탁자는 원상 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특히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도 수탁자는 자기 또는 제3자가 그 위반행위로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신탁재산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1절. 신탁업무 개요: 1. 신탁 총론 : 1-5. 신탁재산의 법적 특징**

1. ( T / F ) 모든 재산권, 즉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모두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2. ( T / F ) 영업신탁에서는 신탁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으로 한정하고 있다.

3.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 T / F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5. ( T / F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 ( T / F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7. ( T / F )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 T / F )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 T / F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혼동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10. ( T / F )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혼동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11. ( T / F )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혼동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12. ( T / F )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이를 신탁재산의 ( )라고 한다.

13. ( T / F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 혼화 또는 가공에 관하여는 각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를 신탁재산의 ( )라고 한다.

14.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 )에 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15.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각 신탁재산 간에 ( )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16.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 )의 ( )를 승계한다.

**1절. 신탁업무 개요: 1. 신탁 총론 : 1-6. 신탁회사의 업무 범위**

1. ( T / F ) 신탁은 자기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제도로서 주로 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해왔다.

2. ( T / F ) 신탁은 재산의 보전과 관리라는 소극적 기능 외에 적극적인 재산의 증식이라는 신탁의 기능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3. 신탁의 기본업무 3가지는?

4.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여 신탁업자가 대출, 증권 기타 유동성 자산 등에 운용한 뒤 신탁종료 시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신탁은?

5.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수탁하여 신탁계약목적에 따라 관리, 처분, 운용한 뒤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운용 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은?

6. 금전과 기타 재산권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인수하는 신탁은?

7. 신탁의 ( )란 신탁회사가 고객과 신탁계약을 하지 않고 ‘민법’상의 대리계약 등을 통하여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 T / F ) 신탁의 부수업무 또한 신탁업무이므로 신탁업을 인가받을 때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취급하고자 하는 부수업무를 신고하기만 하면 모든 종류의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9. ( T / F ) 신탁업자마자 영위하는 부수업무는 차이가 있으나, 주로 업무수탁 및 자산관리, 대리사무 및 자금관리, 금융자문, 유언집행 및 상속재산의 정리 및 분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리사무, 부동산매매 및 임차의 중개 등이 있다.

10. 신탁업자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 영위 (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부수업무 목록

1) 유언집행 및 상속재산의 정리 및 분배

2) 부동산사업과 관련된 금융자문이나 자금관리를 대신 하거나, 부동산의 임대차관리나 시설관리, 보호예수 등 재산의 단순보관업무, 기타 실제 업무집행사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 등을 위한 일반사무관리 등을 신탁회사가 대신하는 재산관리의 대리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리사무

4) 부동산 매매 및 임차의 중개

5) 재산의 보관 관리

12. ( T / F ) 외국환은행이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은행의 금전신탁을 통해 환전, 외국환이 추심 및 지급, 금전의 대차, 외화예금 업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의 파생상품 거래 등 많은 외국환 업무가 가능하다.

13. ( T / F ) 외국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외화자산을 신탁받는 업무,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산 또는 외화자산을 신탁받는 업무, 신탁받는 원화자산 또는 외화자산의 운용을 위한 증권 매매 또는 부동산의 매매와 이를 위한 투자자금의 환전업무 등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한다.

**1절. 신탁업무 개요: 1. 신탁 총론 : 1-7. 신탁의 종류**

1. 신탁의 성립원인에 따라 ( )과 ( ), 신탁목적에 따라 ( )과 ( ), 이익을 지급받는 자에 따라 ( )과 ( ),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 처분 행위에 따라 ( )과 ( ), 위탁자별 금전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따라 ( )과 ( ), 신탁재산에 따라서 ( )과 ( )으로 구분하며, 신탁재산의 운용권한 보유에 따라서 ( )과 ( )으로 구분한다.

2. 신탁의 ( )에 따라 설정신탁(임의신탁)과 법정신탁, ( )에 따라 공익신탁과 사익신탁, ( )에 따라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수탁자의 ( )에 따라 능동신탁과 수동신탁, ( )에 따라 합동운용신탁과 단독운용신탁, ( )에 따라서 금전신탁과 금전 외(재산) 신탁으로 구분하며 ( )에 따라서 일임형신탁과 비일임형신탁으로 구분한다.

3. 금전신탁의 주요 기능은?

4. 금전 외(재산) 신탁의 주요 기능 두 가지는?

5. 금전신탁의 운용방식 두 가지는?

6. 금전 외(재산) 신탁의 운용방식은?

7. 금전신탁의 교부원칙은?

8. 금전 외(재산) 신탁의 교부원칙은?

9. 금전신탁의 증서화는?

10. 금전 외(재산) 신탁의 증서화는?

**1절. 신탁업무 개요: 2. 신탁상품 일반 및 주요내용 : 2-1. 금전신탁의 개요**

1. ( )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받아 운용하고 신탁기간 종료 시에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교부하는 신탁이다.

2. ( T / F )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및 운용방법 등을 지시할 수 있다.

3. ( )란 운용대상 지정 유무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및 운용방법 등을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시한 대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이다.

4. ( )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및 운용방법 등을 수탁자에게 일임한다.

5. 신탁 ( )은 신탁계약 건별로 신탁재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6. 신탁 ( )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운용한다.

7. ( T / F ) 단독운용은 특정금전신탁이 해당된다.

8. ( T / F ) 합동운용은 불특정금전신탁 또는 투자신탁이 해당된다.

9. ( T / F ) 현재 판매가 가능한 합동운용하는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은 없다.

**1절. 신탁업무 개요: 2. 신탁상품 일반 및 주요내용 : 2-2. 특정금전신탁**

1. ( )은 위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수탁자에게 지시하면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발생한 수익에서 신탁보수 및 제 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수익을 수익자에게 실적배당하는 ( ) 금전신탁 상품이다.

2. 특정금전신탁은 ( )이 원칙이지만 고객이 운용지시를 할 때 일정 부분 수탁자에게 투자판단을 위임하는 ( ) 특정금전신탁도 가능하다.

3. ( T / F )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의 변경을 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기적인 운용내역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탁계약서에 명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을 그 다음달 ( )일까지 위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5. ( T / F ) 위탁자는 신탁업자에게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6. 위탁자는 신탁업자에게 위탁자 본인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내역 및 신탁재산의 평가금액 조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7. 특정금전신탁은 ( )의 운용지시에 의해 운용하는 ( )상품으로서 운용결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탁자(신탁회사)가 원금을 보전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

8.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 과세 / 비과세 )하는데, 이는 수탁자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9. ( T / F ) 위탁자가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된다.

10.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서 수탁자의 승낙을 얻지 않아도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속된다.

11. ( T / F ) 신탁기간, 신탁금액, 신탁보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서 정하며,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특정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 )의 경우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12. ( T / F ) 위탁자의 운용지시는 위탁자의 자필로 기재 받지 않아도 된다.

13. ( T / F ) 위탁자가 특정한 종목을 2가지 이상 지정하는 경우 각각의 투자비중도 위탁자가 직접 기재해야 한다.

14. ( T / F ) 운용지시의 변경, 신탁재산의 운용내역과 평가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운용보고서의 통지, 이익계산 및 지급, 원본과 이익의 보전(실적배당), 신탁의 해지, 신탁의 중도해지, 양도 및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은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15. ( T / F )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은 기재되지 않아도 된다.

16.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이며, 신탁해지일 또는 이익지급일(원본가산일 포함), 기타 세법에서 정한 시기가 된다.

17. 특정금전신탁 종류를 말하시오.

18. ( ) 특정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주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고객은 투자대상자산의 신용위험에 상당하는 위험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수취하는 구조로 예금금리+a 수익을 추구한다.

19. ( T / F ) 채권형(확정금리형) 특정금전신탁은 적극적 매매 차익을 추구하며 확정금리 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목적과 상반된다.

20. ( ) 특정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대부분 신탁회사의 전문적인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주식을 운용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최근에는 신탁을 활용하여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통하여 증권회사의 위탁거래를 이용하는 직접투자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식형 상품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다.

21. (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 방법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신탁업자에게 운용재량을 부여하고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종목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신탁재산을 주로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특정금탁신탁을 말한다. 자문형특정금전신탁 계약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개월이 경과한 운용정보만이 제공이 가능하고 운용정보 제공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정보제공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운용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시간 중에 서면 등으로 요청 사유를 제시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를 확약하는 경우에만 제공하여야 한다.

22. ( T / F ) 자문형(주식)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할 수 있다.

23. ( ) 특정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주로 ELS, ELB, DLS, DLB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24. ( )(이)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애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25. ( )(이)란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이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분류되면서 파생결합사채로 변경되었다.

26. ( T / F ) 파생결합 상품은 원금보장형, 원금부분보장형, 원금비보장형 등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설계가 가능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통한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수익구조를 통한 사전 수익률 예측이 가능하다.

27. ( T / F ) 파생결합 상품은 수익구조가 복잡하여 일반고객이 완전히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익구조에 따라서 투자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다.

28. ( T / F ) 파생결합증권은 주로 장내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구조화하는 상품이다.

29.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 )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한다 / 안한다 ).



30. ( )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ETF 또는 ETN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말한다. ETF 또는 ETN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며, 특정한 지수를 추종하므로 분산투자 효과가 ( 크고 / 작고 ) 비용이 ( )며, 운용이 ( 투명 / 불투명 )하다.

31. ( ETF / ETN )은/는 발행사 선순위 무보증 사채의 소유권이다.

32. ( ETF / ETN )은/는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33. ( ETF / ETN )은/는 펀드에 대한 소유권이다.

34. ( ETF / ETN )은/는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한다.

35. ETN의 법적 성격은 ( 파생결합증권 / 집합투자증권 )이다.

36. ETF의 법적 성격은 ( 파생결합증권 / 집합투자증권 )이다.

37. ( ETF / ETN )의 연간 수수료는 0.4%~1.25%이다.

38. ( ETF / ETN )의 연간 수수료는 0.14%~0.82%이다.

39. ( T / F ) ETF와 ETN 모두 장중에 가격 결정한다.

40. ( T / F ) ETF의 만기는 없다. 있으면 몇 년인가?

41. ( T / F ) ETN의 만기는 없다. 있으면 몇 년인가?

42. ( ) 특정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 해외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43. ( T / F ) 해외채권은 국가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44. 해외투자형 특정금전신탁은 이자소득과 매매차익 등의 일반적인 수익은 물론 ( )을 기대할 수도 있다.

45. ( T / F ) 신탁회사는 헷지 목적에 의한 선물환 거래나 통화 스왑을 통해 환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

46.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 )소득으로 분류되어 (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 포함 / 불포함 ) 된다.

47. 양도소득세는 단일 세율로 ( 20% / 22% )이며, 연 ( )만원까지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손실을 봤거나 보유 중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48. ( ) 특정금전신탁 MMT는 초단기 일일운용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시장금리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자금 관리를 위한 신탁상품이다. 시장금리를 즉시 반영하므로 금리 ( )기에 비교적 유리하며 입출금이 ( 자유롭고 / 제한적이며 ) 비교적 높은 시장금리를 지급하므로 초단기 자금관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49. MMT, MMF, MMDA의 이자지급방식은 각각 ( 실적배당 / 확정금리 中 택1 ) 이다.

50. MMT, MMF, MMDA의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는?

51. MMT, MMF, MMDA의 입출금적용은? ( 당일 입/출금 / 익일 입금 및 환매 中 택1)

52. MMT, MMF, MMDA의 예상수익률은?

53. ( MMT / MMF / MMDA )는 1일 우량자산 운용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

54. ( MMT / MMF / MMDA )는 펀드 편입채권의 가중 평균 잔존만기 90일 이하로 비교적 높은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다.

55. ( MMT / MMF / MMDA )는 예금자보호가 되며 당일 입/출금이 된다.

56. ( MMT / MMF / MMDA )는 예상수익률 편차가 적다.

57. ( MMT / MMF / MMDA )는 당일 입/출금이 된다.

58. ( MMT / MMF / MMDA )는 시장금리 즉시 반영으로 금리 하락 시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59. ( MMT / MMF / MMDA )는 익일 입금 및 환매 운용자산의 신용위험 발생 시 환매를 제한한다.

60. ( MMT / MMF / MMDA )는 낮은 금리 및 계좌 잔액 및 예치기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61. (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회사에서 취득하는 방법, 공개매수에 의한 방법, 신탁계약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에 반환받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특정금전신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이다.

62. ( ) 신탁형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63. ( T / F ) 신탁형 ISA는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64. 신탁형 ISA 가입대상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 )개 과세기간 동안 ( )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 )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65. 신탁형 ISA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이 된다.

66. ( T / F ) 외국인 근로자 등 거주자 확인은 계좌 가입시 가입서류에 거주자 확인란을 별도 추가하여 작성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6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 )원 이하로 소득공제장기펀드(연 ( )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 )만원 한도)의 가입자는 해당 계약금액 총액만큼 ( 가산 / 차감 )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연 납입한도는 ( )만원이며 미납입 한도는 다음년도 이월 납입이 ( 가능 / 불가능 )하다.

68. ( T / F ) 미납입한도 = 2천만원 \* [1+가입 후 경과년수(4년 이상인 경우 4년)]

6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는 ( )년 이상이다.

70. ( T / F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기 전 계약기간 연장, 계좌 해지, 만료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71. ( T / F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등의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의무가입기간(5년) 결과 전 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 및 손익통산은 유지된다.

72. ( T / F ) 특별해지로 인해 계약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가입자로부터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반드시 제출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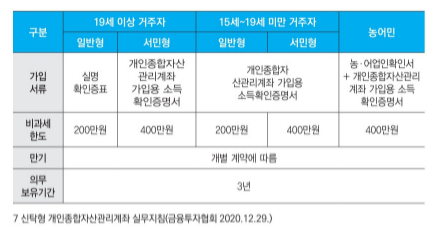
73.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 )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응하여야 한다.

74. ( T / F )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납입원금 내 인출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75. ( T / F ) 가입자의 중도인출 요청에 따라 납입원금을 인출 시 가입자와 사전에 체결한 약관 등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인출일까지 발생한 보수/수수료와 인출일 현재 예상되는 세금금액 상당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76.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통산손익에 대하여 일반형은 ( )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 가입자의 경우에는 ( )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 )%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1절. 신탁업무 개요: 2. 신탁상품 일반 및 주요내용 : 2-3. 불특정금전신탁**

**1절. 신탁업무 개요: 2. 신탁상품 일반 및 주요내용 : 2-4. 재산신탁(금전 외 신탁)**

1. 재산신탁 종류 5가지는?

2. ( )신탁이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아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 및 개발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 ( )신탁은 신탁목적 및 신탁회사의 업무범위에 따라 ( 4가지 신탁 종류 말하시오. )으로 구분된다.

3. ( )신탁이란 수탁자가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시설관리, 사무관리 등 일체의 관리 업무를 대신해 주는 신탁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에 한하여 관리해 주는 ( )신탁과 소유권은 물론 건물 전반에 관하여 관리해 주는 ( )신탁이 있다.

4. ( )신탁이란 채무자(위탁자)가 채권자(수익자)에게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제3자 소유물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일정기간 해당 부동산을 소유/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변제되면 해당 신탁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신탁으로 ( )은/는 채무변제/담보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5. ( )신탁이란 수탁자가 토지관리 또는 건물의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으로 토지를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신탁 종료 시에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 )신탁과 수탁자가 신탁받은 토지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분양/매각하는 ( )신탁이 있으며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사업을 진행하지만 소요자금 조달은 위탁자가 하는 ( )신탁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 )신탁이 있다.

6. ( )신탁은 부동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방법이나 처분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대규모 부동산으로서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잔금청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처분기간 중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등을 신탁회사의 공신력과 영업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적정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상품이다.

7. ( )신탁이란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관리, 운용, 처분한 후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원본 및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이다.

8. ( T / F ) 수탁자는 유가증권의 원금 및 배당금 수령 등의 관리업무와 의결권 행사 등의 권리 행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9. ( T / F )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유가증권을 수익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 T / F ) 수탁자는 수령한 채권원리금이나 주식배당금, 처분대전, 대여수수료 등을 재운용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1. ( )신탁이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후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수탁한 금전채권의 관리/추심업무 및 운용수익 등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12. ( T / F ) 금전채권신탁은 매출채권 등을 신탁수익권으로 발행하고 이를 자산유동화하는 목적으로 발전하였고 그 활용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13. ( )신탁이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유언으로 재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신탁하고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4. 신탁회사가 유언집행의 위임을 받아 유언서를 보관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 그 유언에 따른 유산분배 등을 집행하는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 )신탁이라고 한다.

15. ( T / F ) 유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전에 유언대상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업무까지 포함한다.

16. ( )신탁이란 신탁재산으로 동산을 인수하는 신탁을 말한다. 형식적인 신탁목적은 동산의 관리와 처분이지만 실질적인 신탁목적은 신탁수익권의 양도를 통한 자금조달에 있다. 운송용 설비 또는 제조 설비의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동산설비신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1절. 신탁업무 개요: 3. 신탁상품 판매절차 : 3-1. 신탁상품과 투자자보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권유절차로서 ( )의무, 투자성향에 적합한 ( )의무,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한 ( )의무, 주요사항 (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투자권유준칙을 정하고 이 준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 ( T / F ) 투자권유란 특정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 T / F )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관리신탁계약과 원본손실 위험이 없는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은 제외하며, 상품 특성상 퇴직연금은 별도의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1절. 신탁업무 개요: 3. 신탁상품 판매절차 : 3-2. 신탁계약 체결절차**

1. 신탁계약 체결절차 6단계를 말하시오.

2. ( T / F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맞춤성 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 T / F ) 투자자 정보 미제공 확인서를 징구하고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문투자자가 투자자 유형화를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않고 자기의 투자유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 T / F ) 파생상품 등으로 투자되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를 징구하더라도 일반투자자와 신탁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5. ( T / F )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 T / F )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7. ( T / F ) 전문투자자는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법 조항 중 투자권유법, 서면자료 사전 교부, 고객정보확인서, 계약 체결, 투자일임보고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8. ( T / F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 신탁회사가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는 일임형 특정금전신탁 및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9. ( T / F ) 신탁회사는 신탁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분류체계 및 투자자의 위험등급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0.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매 ( )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신탁재산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투자자의 투자성향 5단계는?

12. 투자자의 투자성향 중 ( )형은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3. 투자자의 투자성향 중 ( )형은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14. 투자자의 투자성향 중 ( )형은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15. 투자자의 투자성향 중 ( )형은 시장평균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하고,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16. 투자자의 투자성향 중 ( )형은 투자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신의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17. ( T / F ) 신탁회사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에 대한 위험도 분류 시, 환위험을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여야 한다.

18. 신탁회사는 신규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에게 DLS, ELS, ELF, DLF 등의 금융 투자상품을 추천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지정 받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 )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투자자에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의 ( )에 의하여 권유하여야 한다.

19. ( )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영화하고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에 부합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 투자자 유형별 상품 위험 등급은?

1) 안정형 ( )등급(매우 낮은 위험) 이하

21. ( T / F ) 신탁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고 신탁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이를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품설명서 및 상담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

22. 신탁회사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4가지

23. ( )의 경우는 세부자산배분유형 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4.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5가지는?

**1절. 신탁업무 개요: 3. 신탁상품 판매절차 : 3-3. 신탁재산 운용결과 통보**

1.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종목, 비중 등)과 평가금액을 신탁업자가 정하는 방법(창구, 유/무선, 팩스,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매 ( ) 이상 신탁운용보고서를 우편, 이메일 등에 의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 )과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탁고 잔액이 ( )만원 이하인 경우, 신탁계약기간이 ( )개월 ( 이상 / 미만 )인 경우로서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탁운용보고서 통지를 생략할 수 ( 있다 / 없다 ).

**2절. 투자신탁 업무 : 1. 투자신탁 총론 : 1-1. 투자신탁의 개념과 역사**

1. ( T / F ) 투자신탁은 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자를 대신하여 위탁회사가 유가증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 T / F ) 투자신탁은 실적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3. ( T / F )우리나라 투자신탁은 ( )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년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재정 공포로 시작되었으며, 이 후 ‘증권투자신탁업’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 )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 )년 2월 자본시장 관련 법률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 )개를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 T / F ) 자본시장법의 특징으로는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 기능 중심에서 금융기관 중심으로 재편한다.

5. ( T / F ) 자본시장법의 특징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로 전환하여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6. ( T / F ) 자본시장법의 특징으로는 투자자 보호체계를 선진화하여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였으며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기구(집합투자기구)를 다양화하였다.

7. ( T / F ) 집합투자라는 명칭 이전에 간접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8. ( T / F ) 집합투자기구 형태도 자금의 집합(pooling)이 가능한 모든 형태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

9. ( T / F ) 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펀ㄷ, 펀드 등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언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절. 투자신탁 업무 : 1. 투자신탁 총론 : 1-2.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특징**

1. ( T / F ) 집합투자란 3인 이상에서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펀드(집합투자기구) 재산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되어져 집합운용되는데 이는 공동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 있다 / 없다 ).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재산의 운용에 간섭할 수 ( 있는데 / 없는데 ) 이를 간접성이라고 한다.

3.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게 되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운용자(집합투자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 )을 원칙으로 한다.

4.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하고 따라서 다수의 수익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펀드의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의결권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 )이/가 적용된다.

5. ( T / F )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은 펀드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자산이나 판매회사의 고유자산과 법적으로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한다.

6. ( T / F ) 펀드재산은 신탁회사에서 별도 신탁재산으로 보관/관리된다.

7. ( T / F ) 펀드는 분산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2절. 투자신탁 업무 : 1. 투자신탁 총론 : 1-3. 펀드(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와 법률관계**

1. 펀드(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는 신탁형의 ( ), 회사형의 ( )가 있고, 조합형으로 ( )이 있다.

2. ( T / F ) 법정형태에 따라 투자자의 지위가 서로 달라진다.

3. 신탁형에서의 투자자의 지위는 ( ), 회사형에서의 투자자의 지위는 ( ), 조합형에서의 투자자의 지위는 ( )의 지휘를 갖게 된다.

4. ( T / F ) 펀드(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상품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5. 자본시장법에서는 편입비율 ( )% 이상의 주요 투자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로 분류하였다. 단,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 ( 전부 / 일부 )를 CD, 단기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6. 펀드(집합투자기구) 형태 3가지는?

7. ( )형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8. ( T / F )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수탁자), 신탁업자(위탁자), 투자자(수익자)의 3자간 신탁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형 집합투자기구이다.

9. ( T / F ) 신탁에 의하면 신탁 재산은 신탁업자에게 이전되어 신탁업자의 명의로 보관되고 관ㄹ되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확보된다.

10. ( T / F )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감시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11. 신탁재산을 제공한 투자자는 신탁의 수익자로서 운용이익의 분배청구권 및 원금의 상환청구권 등 수익권을 가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 있는 / 없는 ) 수익증권이 발행된다.

12. ( )형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등이 있으며, 미국의 Mutual Fund가 그 전형이다.

13. ( )형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를 목적으로 이들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또는 지분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이때 회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업무의 집행(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고 자산의 보관은 따로 신탁업자에게 위탁한다.

14. 자본시장법은 ( )형 집합투자기구로서 ( )조합과 ( )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15. ( T / F )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과 같은 계약형이라고 할 수 있다.

16. 조합형의 경우 법인격이 ( 있고 / 없고 ) 원칙적으로 신탁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재산이 조합계약 당사자로부터 ( 분리된다 / 분리되지 않는다 ).

17.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는 지분의 내용이 신탁형과 회사형이 ( 같다 / 다르다 ).

18.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는 그 양도성이 제한이 ( 있다 / 없다 ).



19. ( 펀드(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中 1 )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되거나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되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업무는 투자신탁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재산 운용 및 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 운용, 자사 집합투자증권 직접 판매, 투자설명서 작성, 수익증권 발행, 금융위원회 및 투자자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준가격(NAV) 계산업무, 자산운용 보고서 교부 등이다.

20. ( 펀드(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中 1 ) 신탁업자(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를 업으로 하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업무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 취득/처분의 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등의 수령,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 등에 대한 감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교부 등이다. 신탁회사는 계열회사(해당 집합투자업자)와의 수탁계약이 ( 허용되며 / 허용되지 않으며 ), 집합투자재산을 고유재산 또는 다른 재산과 거래 (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 ).

21. ( 펀드(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中 1 ) 투자회사의 운영 및 투자회사재산의 계산업무 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 하지 않아도 된다 ). 투자회사는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반드시 위탁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 계산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 있다 / 없다 ).

22. ( 펀드(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中 1 )의 주요 업무는 투자회사 운영, 주식발행 명의개서, 투자회사 재산의 계산, 투자신탁의 계산, 법령 및 정관에 의한 통지, 공고 이사회 또는 주총 소집 및 운영 등이다. 자격요건은 ‘상법’상 주식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23. ( 펀드(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中 1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펀드(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中 1 )은/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선물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다. ( 펀드(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中 1 )은/는 투자매매업(판매계약) 또는 투자중개업(위탁판매계약)의 인가를 ( 받아야 한다 / 받지 않아도 된다 ). 주요 업무는 투자권유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설정) 및 환매이다.

24. ( T / F ) 23번의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보통 직접판매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판매한다.

25. 판매회사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 )를 수취한다.

26. 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의 대가로 ( )를 수취한다.

27. ( 펀드(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中 1 ) 회사는 펀드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이며, ( )평가회사는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하는 자로서 ( 금융위원회 / 금융투자협회 )에 등록하여야 한다. ( )평가회사는 펀드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 금융위원회 / 금융투자협회 )에 공시하여야 한다.

**2절. 투자신탁 업무 : 2. 펀드의 이해 : 2-1. 펀드의 기본 개념**

**1.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 운용보수 / 판매보수 / 수탁보수 / 일반사무관리보수 )(이)라고 한다.**

2.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 2 / 5 / 10 / 100 / 1000 )분의 1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1년 / 2년 / 3년 )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 2 / 5 / 10 / 100 / 1000 )분의 1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 )분의 1에서부터 ( )분의 ( )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해우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라고 한다.

4. 판매수수료는 판매시점에 취득하는 ( )와 환매시점에 취득하는 ( )로 두 종류가 있으며,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 )분의 ( )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5.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는 일정기간 환매를 억제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안정을 기하고 환매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에 충당을 위하여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성격을 지닌다.

6. 보수(Fee)의 경우, 매 영업일 펀드 전체 순자산가치에서 총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한 후,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고시하므로 기준가 산정에 영향을 ( 미친다. / 미치지 않는다. )

7. 수수료(Commission)의 경우, 수수료를 ( 합산한 / 제외한 ) 금액이 투자되므로 기준가 산정에 영향을 ( 미친다. / 미치지 않는다. )

8. ( T / F ) ‘좌’는 펀드(수익증권)의 거래단위이다.

9. ( T / F ) 매입좌수 = 신규금액 / 매입 시 적용 기준가격 \* 1000

10. ( T / F ) 펀드의 기준가격은 집하투자증권의 거래단위(좌)당 순자산가치이다.

11. 펀드의 기준가격은 집합투자재산의 실질 자산가치를 나타내며 통상적으로 ( )좌 단위로 표시하고 원 미만 ( ) 자리까지 계산하고 ( ) 자리 미만은 반올림한다.

12. ( T / F ) 펀드 기준가격 산출방법: [(펀드의 총 자산 – 부채 및 비용\*) / (펀드의 총좌수)] \* 1,000  
비용\* : 주식거래비용, 보수(판매, 운용, 수탁, 사무관리), 기타 펀드 운영비용 등

13. 펀드 과표기준가격은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원 중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손익만을 ( 합산 / 제외 )하여 산출한다.

14. ( T / F ) 펀드 과표기준가격 산정방법: [(펀드원본액+과세대상손익-비용안분액) / (펀드의 총좌수)] \* 1,000

**2절. 투자신탁 업무 : 2. 펀드의 이해 : 2-2.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에 대한 규제**

1. 장 마감 후 거래란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환매와 관련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 )하는 시점을 경과하여 매매주문을 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주문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행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시장정보를 기초로 수익증권 매입 또는 환매를 함으로 인해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2. 자본시장법에서는 장 마감 후 거래에 대한 규제를 두어 주식이 ( )% 이상 편입된 펀드의 경우 ( )분, 그 외 펀드는 ( )시 이전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레버리지 펀드의 경우 ( )시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2절. 투자신탁 업무 : 2. 펀드의 이해 : 2-3.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6가지를 말하시오.

2. ( )형 집합투자기구는 ( )형 펀드 :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펀드자산 총액의 ( )%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 ( )형 펀드로 설립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펀드에 한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 제한하는 / 제한하지 않는 ) 펀드이다. ( )형 펀드는 ( )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 )형 펀드는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이 ( 적용된다 / 적용되지 않는다 ).

2. ( )형 집합투자기구는 동일한 투자기구 내에,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많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가진 펀드로서 한 펀드 내에 각각의 종류(class)별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기준가격도 달리 산정한다.

3. ( )형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자펀드)을 모펀드에만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이다. 일반적으로 모펀드(Master Fund)와 자펀드(Feeder Fund)의 운용회사는 ( 동일하며 / 동일하지 않으며 )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 위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4. 모자형 펀드의 요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자펀드가 모펀드 이외의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2)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해야 한다.

3) 자펀드 외의 자가 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5. ( )형 집합투자기구는 보수의 펀드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약에 의하여 각 펀드의 투자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펀드이다. 이 펀드는 펀드 간 전환 시 환매수수료가 ( 있으며 / 없으며 )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해 준다.

6. ( )펀드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펀드이다. ( )펀드는 설정/환매가 자유롭게 ( 허용되며 / 허용되지 않으며 ), 펀드 설정일로부터 ( )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한다.

7. ( T / F ) 상장지수펀드는 특정한 지수를 추종하므로 인덱스펀드의 일종이다.

8. ( T / F ) 상장지수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므로 인덱스펀드와 주식 거래의 장점을 모두 합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9. ( )집합투자기구란 공모에 의하지 않고 해당 집합두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여 투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 )는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는 상대적으로 ( 높은 / 낮은 ) 수준의 제약조건을 두고 있으나, ( )의 경우에는 그 해당 투자자의 수가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 높은 / 낮은 )수준의 제약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투자자 총수는 ( )인 이하이다.

10. ( 사모펀드 / 공모펀드 )는 비공개 모집 방법이다.

11. 사모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 있다 / 없다 ).

12. 공모펀드는 상품 출시 전 증권신고서를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에 제출하고 승인이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

13. ( 사모펀드 / 공모펀드 )는 투자 대상이나 편입비율 등이 제한이 없다.

14. 공모펀드의 경우 총액의 ( )% 이상, 유가증권, 채권 등 단일 상품에 ( )% 이상 투자가 ( 가능 / 불가)하다.

15. ( T / F ) 사모펀드의 투자금액은 제한이 없다.

16. 사모펀드는 ( )형 사모펀드와 ( )형 사모펀드가 있다. 여기서 ( )형 사모펀드는 레버리지 200% 이하는 ( )억 원 이상, 200% 초과는 ( )억 원 이상이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 )억원 이상(GP임원, 운용역 ( )억원)이다.

17. 국내채권형 펀드의 과세체계의 경우, 이익은 모두 ( )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과표기준가와 시가기준가가 ( 동일하다 / 동일하지 않다 ).

18. 국내주식형 펀드의 과세체계의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주식투자에 따른 매매차익과 투자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주식배당소득, 그리고 채권 및 기타 금융상품 운용을 통해서 얻는 이자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주식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은 펀드 내에서도 ( 과세 / 비과세 ) 이익이 되므로 시가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 동일하다 / 동일하지 않다 ). 따라서 주식형 펀드는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 적은 / 큰 )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 해외펀드의 과세체계의 경우,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 )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 대상이다 / 대상이 아니다 ). 펀드에 포함된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이익에 과세한다.

20. 상품 속성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1) 법적 설립형태에 따라 ( )형과 ( )형으로 분류한다.

2) 모집방식에 따라 ( )형과 ( )형으로 분류한다.

3) 추가 판매 가능 여부에 따라 ( )형과 ( )형으로 분류한다.

4) 환매 가능 여부에 따라 ( )형과 ( )형으로 분류한다.

5) 운용대상 증권 종류에 따라 ( )형, ( )형, ( )형으로 분류한다.

6) 상장여부에 따라 ( )형과 ( )형으로 분류한다.

7) 투자 방식에 따라 ( )형과 ( )형으로 분류한다.

8) ( T / F ) 수익증권거래는 회사형(투자회사)이다.



**2절. 투자신탁 업무 : 3. 펀드영업실무 : 3-1. 펀드의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요**

**2절. 투자신탁 업무 : 3. 펀드영업실무 : 3-2. 펀드 표준판매 절차**

1. ( T / F ) 주권 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2. ( T / F ) 펀드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3. 점수별 투자성형 분류 중 안정형은 ( )점 이하이며, 안정추구형은 ( )점, 위험중립형은 ( )점, 적극투자형은 ( )점, 공격투자형은 ( )점 초과이다.

4. ( T / F ) 만일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 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투자자가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파생상품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거래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5. 금융회사들은 투자자정보의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배점결과에 따라 투자자유형을 분류하는 (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6.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에게 ELS, ELF, ELT, DLS, DLF, DLT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하여 추선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 )를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 T / F ) 일반투자자에게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용사가 금융회사의 계열사임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8. ( T / F )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비계열운용사의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9. 유사한 펀드의 정의 3가지를 말하시오.

10. ( T / F ) 펀드의 향후 전망, 운용 안정성, 판매전략 등을 감안하여 달리 투자권유할 수 있다.

11. ( T / F ) 투자자가 파악된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펀드에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자확인서의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또는 부적정 파생상품 등 거래 항목에 서명/날인 받아야 한다.

12. ( T / F ) 투자 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펀드를 재권유할 수 있다.

13. 펀드 재권유 금지 등록 후 ( )개월 이내 재권유 금지 해제 의사를 투자자가 밝힐 경우 재권유 금지 취소란에 투자자의 서명/날인 후 펀드 권유가 가능하다.

14. ( 간이투자 / 정식투자 )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15. ( T / F )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자에게 펀드의 성격 및 위험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투자자를 이해시키고 투자자로부터 자필기재 및 서명으로 확인을 받고 고객교부용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를 투자자 앞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6.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기본사항은?

17. ( )는 투자자의 펀드 매수 이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에 대해 유지/관리, 주기적 잔고통보, 자산운용보고서 등이 해당된다.

18. 투자자사후관리서비스는 수동적 서비스와 적극적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 수동적 / 적극적 ) 서비스에는 투자자의 전화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이 있고, ( 수동적 / 적극적 ) 서비스에는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보고서 발송, 우수(인기)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19. 펀드 표준판매프로세스 6단계를 말하시오.

20. ( )단계 : ( ) –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확인한 후 질문지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다.

21. ( )단계 : ( ) – 투자자의 펀드 가입 이후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에 대하여 유지, 관리, 주기적 잔고 통보, 자산운용보고서 등 제공, 우수(인기) 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22. ( )단계 : ( ) –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펀드를 선정, 권유함.

23. ( )단계 : ( ) – 투자자에게 권유대상 펀드의 운용전략, 운용대상자산, 원본손실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 보수 및 수수료 등 비용, 환매방법 등

24. ( )단계 : ( ) – 질문지, 상담결과를 점수화(scoring system)하는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

25. ( )단계 : ( ) –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권유를 중단하여 투자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제공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펀드가입관련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26. ( T / F ) 금융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27. 금융회사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8. ( ) 등의 금지 :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29. ( T / F ) 법 제103조 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30. ( ) 금지 : 금융회사는 투자권유 시 다음 각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해우이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불초청권유의 금지),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 제외함 / 포함함 ).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권유 가능.

-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하는 해우이  
- 거부의사 표시 후 ( )개월이 지난 경우  
-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31. ( T / F ) 로드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지 않는 상품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32. ( T / F )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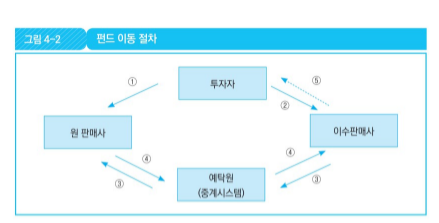
**2절. 투자신탁 업무 : 3. 펀드영업실무 : 3-3.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1. 판매회사 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회사 선택권 확대를 위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 부담하여 / 부담 없이 )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이다.

2. 제도 시행 초기에는 ( 공모펀드 / 사모펀드 )만 펀드이동이 가능했으나, 2012년 ( 공모펀드 / 사모펀드 )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 공모펀드 / 사모펀드 ) 중 상품성격이나 세금문제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에 부적합한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 펀드(전환형 펀드), 세제혜택펀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 ( T / F ) 모든 펀드 계좌는 이동 대상이 된다.

4. 이동일로부터 ( )일이 경과하지 않은 계좌는 이동이 제한된다.

****

**[여신]**

**1장. 여신일반**

**2장. 여신상품**

**3장. 여신담보 및 관리**

1. ( )담보에는 보증이 있으며, ( )담보에는 유체동산, 지명채권이 있다.

2. ( )담보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3. ( ) : 보증인이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채무로서 은행과 일반 거래관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4. 연대보증은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를 각각 독립해서 ( 전부 / 일부 )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5. ( T / F ) 연대보증은 한 사람이 채무를 전부 이행하면 나머지 사람의 채무도 소멸하는 보증채무이다.

6. ( T / F ) 연대보증도 부종성을 가진다.

7. ( T / F ) 연대보증도 일반 보증이 가지는 보충성이 있다.

8. ( T / F ) 연대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다.

9. ( T / F ) 연대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분별의 이익을 가진다.

10. ( )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판매대금채권 등)을 말하고, ( )란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삼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은행에 질권설정하거나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을 말한다.

11. 지명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양도할 수 ( 있다 / 없다 ).

12. 지명채권은 채권의 성질 또는 법률상 양도금지된 채권은 담보취득을 할 수 ( 있다 / 없다 ).

13. 채권자가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제삼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양도인이 제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하고, 제삼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 이를 지명채권양도의 ( )이라 한다.

14. ( )이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그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 )이란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16. ( 저당권 / 근저당권 )이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인 반면, ( 저당권 / 근저당권 )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일정시점에서 일정금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실제거래에서는 ( 저당권 / 근저당권 )이 대부분 이용되고 있으며, 은행에서도 ( 저당권 / 근저당권 )을 이용하고 있다.

17. ( )이란 주택(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내용을 임대인 이외에 제삼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18. ( T / F ) 주택(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독자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규정이 있다.

19. 주택의 경우는 ( )와 (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고, 상가건물의 경우는 ( )와 ( )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20. ( )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예: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느 한 쪽의 의사표시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1. 상계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 자동 / 수동 )채권,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 자동 / 수동 )채권이라고 한다.

22. ( T / F ) 상계는 따로따로 변제하는 것보다 노력/시간/비용 절약 등의 장점이 있다.

23. ( T / F ) 상계는 채무의 간편한 결제방법으로 이용된다.

24. ( T / F ) 상계는 채권담보로서의 기능도 한다.

25. ( )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그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26. ‘돈을 갚아라’는 소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데 이러한 집행력이 인정된 판결을 ( )이라고 한다.

27. ( T / F )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8. 집행권은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이 대표적이지만 판결 외에도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 등이 작성한 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는 ( )증서와 재판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등이 있다.

29. 경매절차에서 ( )는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말한다.

30. 배당요구종기는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약 ( )개월 후로 정하며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공고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31. ( T / F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나 저당권 등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2. ( T / F ) 그 외 다른 채권자들(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 임금채권자, 조세공과금 등의 주관기관)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3. ( )는 어느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민법 제428조 제1항)로서 이러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 )이라고 한다.

34. ( )은 보증인이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채무로서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태무를 각각 독립해서 전부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그중 한 사람이 채무를 전부 이행하면 나머지 사람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35. 연대보증도 ( )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보증과 다를 바 없으나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이 가지는 ( )이 없어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며(민법 제437조 단서), 연대보증인이 여럿으로 일반 공동보증이 갖는 분별의 이익(민법 제439조)을 가질 수 ( 있다 / 없다 ).

36. ( )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고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무에 대하여 행해지는 보증이다.

37. 근보증 유형 3가지를 말하시오.

38. ( T / F ) 특정근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한정된 종류의 거래(일반자금대출거래, 할인어음거래, 지급보증거래 등)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보증한다.

39. ( T / F ) 한정근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특정된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한다.

40. ( T / F ) 포괄근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보증한다.

41. ( )과 관련 규정에서는 포괄근보증 요구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42. 보증기금의 보증은 채무자로부터 ( )을 받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인의 채권자인 거래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43. ( T / F ) 채권자인 은행들이 이러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할 때에는 신용보증신청 내용과 발급된 신용보증서상 기재사항(개별보증과 근보증, 대출과목, 보증금액 등)이 동일한지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

44. 피보증인과 채무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45. ( T / F ) 신용보증서에는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부대출채권의 관리 및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와 관련하여 특약 또는 약관에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증책이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켜야 한다.

**46. ( T / F ) 연대보증인이 여럿일 경우 주채무를 보증인 수로 나누어서 변제하는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47. 어름대출거래, 할인어음거래 등 일정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채무만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특정근보증  
2) 한정근보증  
3) 포괄근보증  
4) 연대보증**

**48.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1) 은행은 보증기금이 보전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2) 신용보증통지일 이후에 대출이 실해오디어야 하고,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되어야 신용보증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다.  
3) 채무자가 파산/해산/폐업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않고 대출과목을 변경하거나 개별보증에 있어서의 대출기한 연장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절. 담보의 필요성**

1. ( T / F ) 인적담보인 보증은 은행이 채권만족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책임재산을 확장시키는 방법이다.

2. ( T / F ) 보증은 책임재산을 외연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적 담보처럼 채무자와 보증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할 수 없다(채권자평등주의).

3. ( T / F ) 보증은 보증인의 책임재산으로 인한 무자력의 가능성을 낮추며 무자력에 대한 위험성을 종국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4. 인적담보는 ( )과 ( )이 있으나 은행은 이들의 결합형태인 ( )을 이용하고 있다.

5. ( )담보는 채무자 또는 다른 사람(물상보증인) 소유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이들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적 지위를 획득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담보의 기초를 제공받는 것이다.

**2절. 인적담보 : 1. 보증과 연대보증**

1. ( )는 어느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다(민법 제428조 제1항). 이러한 ( )를 부담하는 사람을 ( )이라고 한다.

2.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가 성립, 존속(소멸), 내용(범위) 등의 면에서 주채무의 그것에 따른다( ).

3. ( T / F ) 주채무가 무효, 취소 등으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보증채무는 성립한다.

4. ( T / F )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 보증채무는 주채무보다 그 내용이 무거울 수 ( 있다 / 없다 ).

6. ( T / F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과 관련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보증인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7. ( T / F ) 주채무자의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이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을 갖추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8. ( T / F ) 주채무를 제삼자가 인수하여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9.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민법 제428조 제1항)으로 2차적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보충성이 있다. 이를 보증인의 ( )이라고 한다.

10. ( )보증은 보증인이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채무이다.

11.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를 각각 독립해서 ( 전부 / 일부 )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그중 한 사람이 채무를 전부 이행하면 나머지 사람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2. 연대보증도 ( )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보증과 다를 바 없다.

13.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이 가지는 ( )이 없어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며(민법 제437조 단서), 연대보증인이 여럿이더라도 보통의 공동보증이 갖는 분별의 이익(민법 제439조)을 가질 수 없다.

14. 상행위로 인한 ( )보증(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에서는 연대보증이 원칙적인 형태이다(상법 제57조 제2항).

15. 현재 은행의 소비자금융(가계여신)에 대하여 개인이 연대보증 하는 것이 ( 가능하다 / 폐지되었다 ).

16. ( T / F ) 기업금융의 경우 실제경영자나 최대주주 등 1인만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

17. ( )이란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각 보증인은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절. 인적담보 : 2. 근보증(계속적보증)**

1. ( )이란 어음할인계약/당좌대출계약 기타 은행거래계약,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고 증감변동하는 ( 불특정 / 특정 ) 채무에 대하여 행해지는 보증이다.

2. ( T / F ) 근보증도 보증의 일종이다.

3.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래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 )근보증과 ( )근보증 및 ( )근보증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4. ( )근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특정된 거래계약(예: 2020.04.22 일반자금대출거래)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한다.

5. ( )근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한정된 종류의 거래(일반자금대출거래, 할인어음거래, 지급보증거래 등)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보증한다.

6. ( )근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보증한다.

7. ( T / F ) 근보증도 근저당처럼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민법 제357조 제1항)’과 같은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민법 제428조의3 제1항).

8. 근보증 중 ( )근보증은 보증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가 너무 넓어 보증인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범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9. ‘은행법’(제52조의2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4 제1항 제3호) 및 은행업 감독규정(제88조의2)에서는 ( )근보증 요구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10. 근보증계약 체결시 보증기간을 정하는데 근보증서상 ‘근보증결산기’로서 ( )형, ( )형, ( )이 있으며, 이 보증기간은 보증 대상이 되는 주채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07.23. 선고 2018 다 42231 판결).

11. ( T / F ) 근보증계약서상 근보증한도액은 보증기간 만료, 보증계약 해지 또는 보증 대상인 기본계약이 종료된 때(결산기)에 존재하는 채무 중에서 원금에 이자 등 부수채무를 합하여 보증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한도가 된다.

**2절. 인적담보 :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1.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 )이다.

2.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 )이다.

**2절. 인적담보 :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 3-1.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및 조건변경**

1.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되어야하고, 신용보증통지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 )일 이내에 대추르이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되어야 유효하게 성립된다.

2. ( T / F ) 신용보증의 조건변경은 보증기금으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개별보증에 있어서의 대출기한 연장 등을 할 수 있다.

3. ( T / F ) 보증기금의 통지에 맞도록 보증부대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2절. 인적담보 :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 3-2.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 및 권리 보전의무**

1. ( T / F ) 은행은 보증기금이 보전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2. ( T / F ) 은행은 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과 관련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 T / F ) 은행은 보증부대출금을 피담보채권에서 제외하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 T / F ) 은행은 보증기금과 다른 보증기관이 동일한 대출금에 대하여 함께 보증한 경우에 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5. ( T / F ) 보증부대출이 어음할인방식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어음만기에 어음요건을 완비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그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보전되도록 해야 한다.

6. ( T / F ) 담보물의 경매, 채무자에 대한 회생, 파산, 개인회생 등의 절차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대출 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해야 한다.

**2절. 인적담보 :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 3-3.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기**

1. 은행은 채무자가 약정기일 내에 보증부대출의 원금(분할상환금 ( 미포함 / 포함 )) 또는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 )개월이 경과한 때, 보증부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 )개월이 경과한 때, 지급보증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대지급 발생일로부터 ( )개월이 경과한 때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파산/해산/폐업하거나 계속해서 ( )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을 중단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 3개월 이후 / 3개월 이내 / 6개월 이후 / 6개월 이내 / 답 없음 )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절. 인적담보 :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 3-4.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대위 협력의무**

1. ( T / F ) 은행은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받는 즉시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담보권을 보증기금에게 이전해야 하고, 보증기금이 대위하는 담보물의 점유이전, 대위담보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 대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해야 한다.

**2절. 인적담보 :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 3-5. 보증기금의 면책**

1. ( T / F ) 보증기금은 은행이 보증특약을 위반하거나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한 담보 및 권리 보전의무를 위반한 때 등 보증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제2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대법원은 은행이 본인확인을 잘못하여 채무자 아닌 제삼자에게 보증부대출을 한 경우 보증기금의 면책을 ( 인정하였다 / 인정하지 않았다 ).

3. 시설자금대출시 은행이 기성고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보증기금의 일부면책을 ( 인정하였다 / 인정하지 않았다 ).

4. 은행이 보증기금의 대위변제시 이전해줄 담보를 상실하여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책을 ( 인정하였다 / 인정하지 않았다 ).

**2절. 인적담보 :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 3-6. 보증 조건과 특약 등의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면책주장 사례**

1. ( T / F ) 보증서상 대출과목(외상매출채권)과 실행 대출과목(기업구매자금)의 일치

2. ( T / F ) 개별보증으로 한도대출(근보증) 실행

3. ( T / F ) 구매자금대출로 채무자의 기계구입대금, 회계감사비용 등을 지급

4. ( T / F ) 판매기업 제한 등 보증 특약을 위반한 경우

5. ( T / F )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포함하는 공장저당권 설정 조건임에도 그 중 일부를 누락하여 담보취득 하는 경우

6. ( T / F ) 특정 순위의 근저당권설정 조건임에도 선순위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

7. ( T / F ) 제삼자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8. ( T / F ) 소유권보존등기 전 담보제공을 지체할 경우

9. ( T / F ) 처분금지가처분 전 근저당권서정등기 청구소송 등 담보취득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10. ( T / F ) 확정일자부 양도담보 취득 및 양도담보물 표찰부착 불철저한 경우

11. ( T / F ) 양도담보 목록누락

12. ( T / F ) 담보물 분실 또는 임의 반출시 형사고발여부 등 사후관리 미비에 따른 이행 거절

**3절. 물적담보 : 1. 부동산담보**

1. ( )이란 물건 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제1항).

2. 토지는 ( )로 나누고 거기에 지번을 붙여 특정하며, ( )필의 토지는 ( )개의 부동산이 된다.

3. ( T / F )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4. ( T / F ) 부동산 담보의 대상 목적물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으로 토지상의 수목(입목에 관한 법률)이나 부동산의 공유지분은 대상이 아니다.

5. ( T / F ) 부동산 상의 권리인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지상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민법 제371조).

6. ( T / F ) 부동산과 동산 등의 복합체인 공장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도 대상이 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7. 부동산(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으로는 ( )권, ( )권 및 ( )권이 있다.

**3절. 물적담보 : 1. 부동산담보 : 1-1.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1. ( )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56조).

2. ( T / F ) 저당권은 목적물을 설정자의 수중에 남겨 두고 계속 이용할 수 없다.

3. ( T / F )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외부적인 지배상태에 변화가 없으므로 그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맺는 당사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4. ( )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외적으로 공시하는 방법이다.

5. ( T / F ) 공시제도(등기나 등록)가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6. ( T / F ) 저당권은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인 지상권/전세권(민법 제371조),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면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권리인 광업권/어업권, 나아가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일정한 중기 등), 재산의 집합체로서의 재단(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도 설정할 수 있다.

7. ( T / F ) 저당권은 채권자인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제삼자)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로 그 효력이 생긴다.

8. 저당권은 ( )저당권과 ( )저당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고, ( )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일정시점에서 일정금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9. 은행과 거래처인 기업, 원료공급업자와 제조업자, 제조업자와 그 대리점 사이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채권은 발생과 소멸을 거듭하게 되어 이러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특정채권만을 담보하는 ( )저당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 및 말소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러한 사유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괄하여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 )저당권이 실제 거래에서는 대부분 이용되고 있으며, 은행에서도 ( )저당권을 이용하고 있다.

10. ( )는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삼자) 사이에서 차용금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또는 제삼자) 소유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채권자의 장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미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 T / F ) 가등기담보는 양도담보처럼 미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12. ( T / F ) 가등기담보는 사후적 만족가능성을 현재 확보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정장치로서 기능을 한다.

13. ( T / F ) 가등기담보는 채무가 이행되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불이행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본등기를 이전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14. ( T / F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권자는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

15. ( T / F )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다른 채권자의 청구로 목적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13조 제1항).

16. ( T / F )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경매에 의하지 않고 청산절차를 거쳐 사적실행(소유권 취득)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다.

17. 청산절차는 목적물 평가액 및 담보채권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 ( )통지, ( )통지 후 ( )개월(청산기간) 경과, 청산금(목적물 평가액-채권액) 지급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 청구라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제3조, 제4조).

18. ( T / F ) 차용금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또는 제삼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이전 받은 양도담보권자는 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9. ( )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이다.

20.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은 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식의 담보군으로 등록세, 취득세 등 비용이 ( 적게 / 많이 ) 든다.

**3절. 물적담보 : 1. 부동산담보 : 1-2. 부동산 담보취득시 유의사항**

1. ( T / F ) 모든 부동산을 아무 제한 없이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2. ( T / F ) 특정한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로 담보제공을 금지시키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 T / F )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담보 취득을 하더라도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4. ( )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개인이 설립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와 대학 및 각종 대학교를 말한다.

5. ( T / F ) 담보제공 금지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일반법인 및 개인) 소유 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운동장, 실습 및 연구시설과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및 교재 등에 적용된다.

6. 담보제공 제한(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만 적용되고,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 T / F ) 이러한 금지나 제한에 위반하여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8. ( )법인이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9. ( T / F ) 공익성 및 비영리성으로 인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0. ( T / F ) 공익성 및 비영리성으로 인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11. ( T / F ) 일정금액 이상의 장기차입/기본재산의 처분 및 담보제공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2. ( T / F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제공 받으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취득을 한 경우라도 그 담보취득은 유효가 된다.

13. ( )이란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기한이 재무제표일로부터 ( )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서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처으이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 )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 ( 이상 / 이하 )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주택법’ 제61조는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 )세대(호)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 )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 하에 / 없이 )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둰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나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해우이 및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및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 합병, 분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예외를 두고 있다(제1항).

16. ( T / F )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음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17. ( T / F )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제5항).

18. ‘주택법’상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당해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 ( 있다고 / 없다고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이미 매도(분양)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목적물이 매도(분양)된 것을 알고도 근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 매도인(설정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 유효 / 무효 )라고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41820 판결)

19. ( )법인은 법인소유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48조 제3항)

20. ( T / F ) 의료법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함)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2. 전통사찰의 경우 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 전통사찰보존지를 담보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 받아야 한다 / 받지 않아도 된다 ).

2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외의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담보제공 등을 하기 위해서는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25. ( )이란 물건 중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민법 제99조 제2항).

26. ( T / F ) 지상물일지라도 토지에 정착되지 않으면 동산이다.

27. ( T / F ) 동산은 원칙적으로 질권이나 양도담보권 등 유체동산담보의 대상이 된다.

28. ( T / F ) 동산이지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등기나 등록의 방법으로 공시되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어 동산이 아닌 저당권의 목적으로 된다.

29. ( T / F ) 운송증권이나 창고증권이 작성되어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인 동산은 증권에 의한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0. 동산에 대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으로는 ( )권, ( )권 및 ( )권이 있다.

**3절. 물적담보 : 2. 유체동산담보 : 2-1. 질권**

1. ( )이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인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동산 또는 재산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 T / F ) 질권은 채권자로부터 점유권을 빼앗아 온다.

3. ( T / F ) 질권은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4. ( T / F ) 질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삼자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채무자에 인도함으로써 성립한다.

5. ( T / F ) 목적물의 인도방식은 현실의 인도가 대부분이며 간편한 인도방식(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6. ( T / F ) 목적물을 설정자의 수중에 둔 채로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 만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점유개정도 인정된다.

7. ( T / F ) 질권은 채무 일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8. ( T / F ) 질권자는 자기보다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자, 선박우선특권자 또는 선순위 질권자 등)나 질권성정자의 조세체납으로 세무 공무원들이 목적물을 압류할 경우에 유치적효력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9. ( T / F ) 이들의 신청으로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인도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인도하면 안된다.

10. 질권자는 목적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의 수취권이 ( 있고 / 없고 ),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며, 목적물에 지출된 필요비/유익비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민법 제343조).

11. ( T / F ) 질권자는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12. ( T / F ) 질권자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13.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에는 ( ), ( ), ( )이 있다.

13. ( )는 질권자가 경매신청서와 목적물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실시되는 경매(주로 호가경매)로 매각되는 대금을 배당받는 것이다.

14. ( )는 공정 가격이 있거나 가치가 적은 동산의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채권자가 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15. ( )이란 질권설정자(채무자)가 채무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인 질권자가 변제에 갈음하여 목적물의 소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그밖의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서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 T / F ) 민법은 이러한 계약이 경제적으로 급박한 채무자가 당장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고가의 물건을 싼값에 빼앗기는 수단으로 악용됨을 막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17. ( T / F ) 변제기 전이라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민사채권이라도 변제기 후에 하는 유질계약은 유효하다.

**3절. 물적담보 : 2. 유체동산담보 : 2-2. 양도담보권**

1. ( )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특정한 물건이나 재산권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채무불이행시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의 담보를 말한다.

2. ( T / F ) 양도담보는 ‘소유권이전’이라는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한다.

3. ( T / F ) 부동산과 같이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재산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정자나 제삼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4.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지 않는 물건이나 재산권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삼자에 대하여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나 다만 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변제가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을 복귀시켜 줄 의무를 부담한다( )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5. ( T / F ) 유체동산 양도담보는 양도담보계약과 목적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없어도 된다.

6. ( T / F ) 질권의 경우 설정자가 점유/사용하면서 인도한 것으로 보는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 T / F )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8. ( T / F )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지 않는 유체동산 등에 대한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설정자를 제외한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신탁적양도설)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9. ( T / F )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는 양도담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10. ( T / F ) 양도담보권 실행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는 처분청산 방식이나 담보목적물을 평가하여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귀속청산 방식을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없다.

11. ( T / F )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12.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 전부 / 일부 )를 양도담보권재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 있다 / 없다 ).

13.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여러 개의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 설정이 ( 가능하다 / 가능하지 않다 ).

14.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 하나의 / 여러 개의 ) 재산권으로 보아 유효한 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 있다 / 없다 ).

15.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재고상품/제품 등과 같은 집합물, 특정 농장(돈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등의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 변동 / 일정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6. ( T / F ) 유동집합물이 반출되어 제삼자가 선의취득할 경우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17. ( T / F ) 유동집합물이 반출되어 제삼자가 선의취득할 경우에는 담보권자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여 계속 유지해야 한다.

**3절. 물적담보 : 2. 유체동산담보 : 2-3. 동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 ( )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을 대상으로 채권자 앞으로 동산담보등기부에 담보 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불이행시 현금화하여 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2. ( T / F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2.6.11. 시행)은 질권의 유치적 효력에 따른 기계/생산설비 등의 담보취득의 제한과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권 취득시 공시방법 불명확성 및 이중양도담보에 따른 분쟁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이해 제정되었다.

3. 저당권이 부동산을 주체로 한 ( 물적편성주의 / 인적편성주의 )를 취한 반면 동산담보권은 담보권설정자를 주체로 한 ( 물적편성주의 / 인적편성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4. ( T / F ) 동산담보권은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법이 개정 2022. 4. 21. 부터는 법인과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됨)이 설정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5. ( T / F ) 설정은 동산담보약정과 동산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6. 동산이지만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은 ( )의 대상이다.

7.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과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증권 담보의 대상이 되며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 있다 / 업다 )(제3조 제3항).

8. ( T / F )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 않으나 과실에는 미친다.

9. ( T / F ) 담보목적물을 압류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인도청구를 한 후에는 과실에도 미친다.

10. ( T / F )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물상대위의 대상이 멸실/훼손/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담보목적물의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 및 임대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11. 동산담보권의 존속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전에 (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하다(제49조 제1, 제2항).

**3절. 물적담보 : 3. 지명채권담보**

1. ( )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 )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채무자(또는 담보제공자)가 다른 사람(이를 보통 ‘제삼채무자’라고 한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질권설정 또는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2. 지명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양도할 수 ( 있는 / 없는 ) 것이 원칙이다.

3. 지명채권의 성질 또는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담보로 취득할 수 ( 있다 / 없다 ).

4. 성질상 양도금지 채권으로는 ( ), ( ) 등이 있고, 법률상 양도금지채권으로는 국민연금법 및 각종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4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등이 있다.

5. 당사자 사이에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경우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채권을 양수한 자는 채권양도의 ( 유효 / 무효 )를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6. ( T / F )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양도인이 제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권양도를 제삼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제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7. ( T / F ) 제삼채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제449조, 제450조)

8. ( )채권에는 노무의 제공, 물건의 인도 및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나 이 중 은행이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9. 지명채권에는 예금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특정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납입상품대전채권, 외상매출채권, 정액도급 공사금채권 등의 ( )채권과 보험금청구권 등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채권, 집합채권 등의 ( )채권 등이 있다.

10. ( T / F ) 지명채권담보에 있어서 채권증서는 하나의 증거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증서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 ( T / F )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양도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적채권과 구별되지 않는다.

12. 지명채권을 대상으로 설정할 담보권은 ( ), ( ), ( )이 있다.

**3절. 물적담보 : 3. 지명채권담보 : 3-1. 질권**

1. ( T / F ) 채권증서는 채권이 있다는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며 증서가 없다면 채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소멸된다.

2. ( T / F )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도 질권자가 제삼채무자나 제삼자에 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없는 증서로 질권설정자의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 또는 제삼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 T / F ) 제삼채무자는 질권설정의 통지 또는 승낙 후에 질권설정자 또는 목적채권의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소멸을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349조 제1항, 제451조 제2항).

4. ( T / F ) 채권에 대한 질권자는 목적채권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5. ( T / F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 T / F ) 질권설정된 채권(예금)에 이자가 발생한다면 질권자는 이를 추심하여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이자와 원본에 충당할 수 있다.

7. ( T / F ) 채권질권의 실행은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제삼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수령한 것을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다(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3절. 물적담보 : 3. 지명채권담보 : 3-2. 양도담보권**

1. ( T / F ) 양도담보권이란 양도담보설정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지명채권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았다가 채무이행이 있으면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고, 채무이해잉 없으면 다시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담보이다.

2. ( T / F ) 지명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는 질권과 달리 대항요건으로서 채권양도인의 제삼채무자에 대한 양도사실 통지 또는 제삼채무자의 승낙과 앞에서 언급한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 T / F )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직접 제삼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절. 물적담보 : 3. 지명채권담보 : 3-3. 채권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 ( )담보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취득할 채권을 포함)을 대상으로 채권자 앞으로 채권담보등기부에 담보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불이행시 채권을 추심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2. ( T / F ) 채권담보권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2. 6. 11. 시행)의 동산담보권과 마찬가지로 담보권설정자를 주체로 한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 T / F )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법이 개정되어 2022. 4. 21. 부터는 법인과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됨)만이 설정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4. ( T / F )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과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5. ( T / F ) 채권담보권은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만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6. ( T / F ) 채권담보권의 등기는 성립요건이 아닌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제35조 제1항).

7. ( )란 설정자로부터 이중으로 동일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나 담보권을 설정받은 사람, 동일한 채권을 압류하여 전부받은 설정자의 채권자 등 채권담보권자와 같이 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8. ( T / F ) 채권담조권자와 담보권설정자 모두 법원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삼채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제삼채무자에게 담보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9. ( T / F ) 채권담보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에만 설정할 수 있다.

10. ( T / F ) 채권담보권은 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도 설정할 수 있다.

11. ( T / F )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은 채권담보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선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만 채권담보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12. 채권담보권의 존속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전에 (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하다(제49조 제1, 2항).

13. ( T / F ) 채권담보권자는 담보범위 안에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14. ( T / F ) 채권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절차에 배당요구를 하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절. 주요내용 종합정리**

1.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은 ( ), ( ), ( )이 있다.

2. ( )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 )는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삼자) 사이에서 차용금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또는 제삼자) 소유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채권자의 장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미리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4. ( )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5. ( T / F ) 특정한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담보제공을 금지시키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담보취득을 하는 경우 그 담보취득은 대부분 무효가 된다.

6. ( T / F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은 담보제공이 금지되나, 사립학교경영자 소유 부동산은 담보제공이 금지되지 않는다.

7. ( T / F ) 공익법인 등의 소유부동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8. 동산이란 물건 중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것으로서 ( )이나 ( )의 대상이 되나, 동산이지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어 동산이 아닌 ( )의 목적으로 된다.

9. ( T / F ) 운송증권이나 창고증권이 작성되어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인 동산은 증권에 의한 담보의 대상이 된다.

10. 유체동산에 대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으로는 ( ), ( ) 및 ( )이 있다.

11.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은 ( ), ( ) 및 ( )이 있다.

12. ( T / F ) 지명채권의 성질 또는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담보취득을 할 수 있다.

13. ( T / F ) 채권자가 제삼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 양수인(채권자) / 양도인(채무자) )이 제삼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통지하거나, 이들이 이를 승낙해야 한다. 이를 지명채권양도의 ( )라고 한다.

14. ( )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자 앞으로 채권담보등기부에 담보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불이행시 채권을 추심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15. ( T / F ) 유치원으로 사용 중인 사립학교경영자 소유의 부동산은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얻으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16. 다음 중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1) 임차권  
2) 전세권  
3) 등기된 건물  
4) 항공기**

**17. 다음 중 질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1) 비상장 주식  
2) 은행정기예금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  
4) 등기된 건물**

**18. 유체동산 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지 않는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  
2) 유체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인도방법으로 점유개정도 인정된다.  
3) 증감 변동하는 여러 개의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하여도 양도담보권설정이 가능하다.  
4) 동산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기간 만료 전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갱신은 가능하다.**

**19.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항요건은 제삼채무자에 대한 것과 제삼자에 대한 것이 있다.  
2) 양도인이 제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승낙해야 한다.  
3) 대항요건으로서 통지는 양수인인 은행이 양도인을 대신하여 해도 유효이다.  
4)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는 것이다.**

**4절. 근저당권 : 1. 근저당권의 의의**

1. ( )이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그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제1항 제1문).

2. ( T / F ) 근저당권이 보통저당권과 같은 점은 담보할 채권이 ‘장래에 보류’된다는 것이다.

3. ( T / F )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장차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즉 채권이 증감/변동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357조 제1항 제2문).

4. 근저당권에는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따라 ( )근저당, ( )근저당 및 ( )근저당을 나누어진다.

5. (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특정된 종류의 거래(예: 일반자금대출거래, 지급보증거래, 당좌대출거래 등)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6. (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하다)를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7. (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특정된 계약서에 따른 거래(예: 2021년 4울 22일 일반자금대출거래약정서)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8. ( T / F ) 은행법(제52조의2) 및 은행업감독규정(제88조의2)에서 차주 또는 제삼자로부터 담보취득시 포괄근저당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보지 않아 금지하고 있지 않다.

9. ( T / F ) 은행 실무에서는 포괄근저당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10. ( T / F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포괄근저당을 허용한다.

**4절. 근저당권 : 2.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1. ( T / F )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존속/소멸은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에 의존한다.

2.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이를 ( )이라 한다.

3. ( T / F ) 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되는 중에는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4. ( T / F ) 근저당권은 그 채권최저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정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한다.

5. ( T / F ) 근저당권은 서정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뿐만 아니라 설정 이후에 발생한 채무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정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담보한다.

6. ( T / F )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정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거나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라도 담보한다.

7. ( T / F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원금이 포함되며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8. ( T / F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위약금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저당권처럼 1년분의 제한이 없다)도 포함된다.

9. ( )은 근저당부동산의 후순위권리자나 물상보증인 또는 제삼취득자와 같은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물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10. ( T / F ) 채권최고액은 등기된 채권최고액 이상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11. ( T / F )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에 물상보증인이나 근저당부동산의 제삼취득자는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을 변제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의 말소는 청구할 수 없다.

12. ( T / F )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에 최고액을 변제하면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절. 근저당권 : 3. 근저당권의 확정(피담보채권의 확정)**

1. 근저당권의 ( )이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증감/변동하는 것을 멈추고 채권의 원본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2.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만을 담보하는 ( )으로 변한다.

3. ( T / F )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채권도 담보한다.

4. ( T / F ) 근저당권이 확정된 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 부수채권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5. ( T / F ) 근저당권 확정사유는 법률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따른다.

6. ( T / F ) 대출거래약정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근저당권 확정 사유를 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례나 학설에 따른다.

**4절. 근저당권 : 3. 근저당권의 확정(피담보채권의 확정) : 3-1. 결산기도래**

1. ( T / F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서 정한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2. 은행이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1)근저당권설정자가 지정하는 ( )형, (2)결산기를 지정하지는 않으나 계약일로부터 ( )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으로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 )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하는 ( )확정형, (3)결산기를 지정하지는 않으나 계약일로부터 ( )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으로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는 ( )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3. 실무에서는 대부분 ( )형을 이용하고 있다.

**4절. 근저당권 : 3. 근저당권의 확정(피담보채권의 확정) : 3-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1. ( T / F ) 결산기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 T / F ) 결산기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 T / F )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완제되고 계속 거래할 의사가 없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4. ( T / F ) 계속 거래를 할 의사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아야 근저당권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4절. 근저당권 : 3. 근저당권의 확정(피담보채권의 확정) : 3-3. 경매신청**

1. ( T / F )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부동산을 경매신청 하면 이는 거래를 종료시키려는 의사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2. ( T / F )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된다.

3. ( T / F )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대출금 변제 등으로 경매가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4. ( T / F )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근저당목적물을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5. ( T / F ) 제삼자가 근저당목적물을 경매신청한 경우 그 확정시기는 경매신청시가 된다.

6. ( )근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여러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이다.

7. ( T / F ) 공동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부동산 중 어느 한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경매신청시에 같이 확정된다.

8. ( T / F ) 공동근저당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경매신청 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 소득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

9. ( T / F )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되지 않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우선배당 받은 금액만큼 늘어난다.

**4절. 근저당권 : 3. 근저당권의 확정(피담보채권의 확정) : 3-4. 근저당권자의 압류신청(물상대위권 행사)**

1. ( T / F ) 근저당 목적부동산이 멸실되거나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공용징수 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서 법원에 압류신청(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같이 신청한다)을 하는 경우 근저당권은 경매신청에 준하여 압류신청시에 확정된다.

**4절. 근저당권 : 3. 근저당권의 확정(피담보채권의 확정) : 3-5.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1. ( T / F ) 채무자 또는 근저당부동산의 소유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 선고시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근저당권은 확정되지 않는다.

**4절. 근저당권 : 3. 근저당권의 확정(피담보채권의 확정) : 3-6. 그 밖의 사유**

1. ( T / F ) 담보제공자 겸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이론적으로는 상속인 각자와 근저당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무상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상속인 중 1인에게 하여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근저당 거래를 계속하고, 상속인들로부터 이러한 요청이 상당기간 없다면 근저당권을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 T / F ) 채무자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은 포괄승계로서 근저당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

3. ( T / F ) 채무자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제삼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자가 합병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합병시에 그 근저당권은 확정된다.

4. ( T / F ) 채무자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은행은 근저당권을 실행(경매신청)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 있다 / 없다 ).

5. ( T / F ) 보증인 등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6. ( T / F )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위변제가 있으면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하는 것은 대위변제로 인한 확정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지 신용보증약관상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은행이 근저당권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4절. 근저당권 : 4.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 T / F )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없으면 저당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2. ( T / F ) 부합이 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행하여 진 경우 그 부합물은 타인의 소유가 되지만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4절. 근저당권 : 4.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4-1. 부합물**

1. ( )이란 저당부동산에 부착되거나 결합되어 그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미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거나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 T / F ) 부속건물이나 증축건물이 기존건물의 부합물이 아닌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없다.

**4절. 근저당권 : 4.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4-2. 종물**

1. ( )이란 주물(저당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는 주물소유자의 물건을 말한다.

2. ( T / F ) 종물이라는 개념은 물건에 한한다.

3. ( T / F ) 종물이라는 개념에는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도 포함된다.

4. ( T / F )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상의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토지이용권이나 구분건물의 대지권 등이 종물에 해당한다.

5. ( T / F )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건물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이나 구분건물의 대지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절. 근저당권 : 4.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4-3. 과실**

1. ( )이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인 수익을 말한다.

2. 과실에는 ( )과실(과수의 열매, 동물의 새끼 등)과 ( )과실(지료, 차임, 이자 등)이 있다.

3. 저당권은 ( 점유 / 비점유 ) 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설정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 미친다 / 미치지 않는다 ).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은 후에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 미친다 /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359조).

5. ( T / F ) 압류가 되면 저당권설정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6. ( T / F ) 압류가 되면 저당권자가 과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 저당권설정자 vs 저당권자

**4절. 근저당권 : 4.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4-4. 물상대위물**

1. ( T / F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설정자가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 청구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2. ( T / F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치변형물인 금전청구권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 T / F )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보상금 등이 지급되고 압류를 해야 한다(민법 제342조 단서).

4. 보상금 등이 지급 전에 하는 압류는 보상금 등이 지급되어 설정자의 일반재산과 섞이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의 성질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

5. ( T / F ) 압류는 반드시 근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고 제삼자의 압류로도 무방하다.

6.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인 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이나 타 채권자의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 )요구이다.

7. ( T / F ) 보상금 등이 설정자 등에게 지급된 후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절. 근저당권 : 5. 근저당권의 권리**

1. 근저당권자는 담보되는 채권의 변제가 없으면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을 경매신청한 경우 그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4절. 근저당권 : 6.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6-1. 근저당권과 근저당권**

1. ( T / F ) 근저당권은 하나의 부동산에 여럿이 설정될 수 있다.

2. 근저당권 사이의 순위는 그 설정의 ( ) 순서에 따른다.

3. 선순위 근저당권이 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의 순위가 자동적으로 승진한다(( )의 원칙).

**4절. 근저당권 : 6.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6-2. 공동근저당권**

1. ( )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한다.

2. ( T / F ) 공동근저당권은 하나의 근저당권이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 것이다.

3. ( T / F ) 공동근저당권은 각 부동산마다 하나의 근저당권이 있다.

4. ( T / F ) 공동근저당권은 근저당권 전부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

5. ( T / F ) 공동근저당은 일부 부동산의 가치하락 위험을 다른 부동산으로 보완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의 만족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6. ( T / F ) 공동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신청 할 수 있다.

7. ( T / F ) 공동근저당권자는 일부 부동산만 경매신청 할 수 있다.

8. ( T / F )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만 경매신청을 한 경우라도 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전부를 변제 받을 수 없다.

9. ( T / F ) 공동근저당권은 설정자(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10. ( T / F ) 공동근저당은 근저당권의 순위가 같아야 한다.

11. ( T / F ) 공동근저당은 추후 목적물을 추가하여 설정할 수 있다.

12. ( T / F ) 공동근저당권자의 임의적인 실행선택권으로 인해 공동근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들은 불리한 취급을 받을 수 있다.

13. ( T / F ) ‘민법’제368조는 공동근저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공동근저당권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선순위 담보권자 등의 채권액을 공제한 실제 배당액 기준)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항).

14. ( T / F ) 담보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신청하여 배당받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채권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15. ( T / F ) 후순위저당권자 등은 만일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공동저당부동산에서 우선배당 받았을 금액의 한도에서 그 다른 공동근저당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제2항).

16. ( T / F )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동시배당을 하였으면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을 한도로 자기 채권액 범위 내에서 아직 경매가 되지 않은 공동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가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를 변제자의 ( )라고 한다(민법 제481조).

18.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민법 제368조 제2항)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가 충돌하는 경우 대법원은 ( )에 의한 권리가 우선한다고 한다.

19. 대출금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대출금이 전부 변제되었다면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후순위권리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는다.

**4절. 근저당권 : 6.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6-3. 유치권**

1. ( )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권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이다(민법 제320조).

2. ( T / F ) 점유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여도 된다.

3. ( T / F )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된다.

4.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자동차 수리비용이나 건물 리모델링비용 등),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 )관계라고 한다.

5. ( T / F ) 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물권으로 법률규정의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부동산인 경우에 물권변동에 필요한 등기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87조).

6. ( T / F ) 유치권은 유가증권인 경우 배서를 해야 한다.

7. ( T / F ) 유치권은 근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 권리이다.

8. ( T / F ) 유치권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9. ( T / F ) 유치권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효력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10. 압류의 효력이 발생(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한 후에 부동산에 유치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유치권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 있다 / 없다 ).

11. 유치권은 ( )유치권과 ( )유치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

12. ( )유치권은 위에서 말한 견련관계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으로서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다.

13. (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14. ( )유치권은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5. (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취득이 당사자 간의 상행위에서 생기면 충분하고 특정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그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16. ( T / F ) 민사유치권은 그 물건과의 견련관계가 없고 채무자 소유이면 성립한다.

17. ( T / F ) 민사유치궈은 상사유치권처럼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성립되더라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18. ( T / F ) 상사유치권은 일반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19. ( T / F ) 상사유치권은 근저당권과는 그 성립 전후로 우열을 정한다.

20. ( T / F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저오디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으로 설정 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으로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21. ( T / F )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근저당권자 등이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근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절. 근저당권 : 6.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6-4. 법정지상권**

1. ( )이란 타인 소유 토지를 그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지하철, 터널, 송전주, 광고탑 등)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79조).

2. ( T / F ) 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로써 성립하지 않지만 법률규정에 따라 성립한다.

3. ( T / F )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토지나 건물 한쪽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 T / F )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에 관한 약정을 맺을 기회가 없어 건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5. ( )이란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이 없어도 일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을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민법 제366조).

6. 법정지상권 발생요건은 첫째,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

7. ( T / F )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8. ( T / F )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만을 의미한다.

9. ( T / F )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 및 건축 중인 건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 T / F )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있었으나 후에 멸실된 후 새로운 건물이 건립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종전 건물의 존속기간이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11. ( T / F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12. ( T / F ) 법정지상권 발생요건 둘째,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

13. ( T / F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이미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용권이 없다면 법적인 기초 없이 존재하고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

14. ( T / F ) 법정지상권 발생요건 셋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15. ( T / F ) 법정지상권 발생요건 세 가지를 갖추면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16. ( T / F ) 법정등기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민법 제187조).

17. ( T / F ) 법정지상권 성립시기는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 효력이 발생하는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5조) 성립한다.

18. ( T / F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양수인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19. ( T / F ) 법정지상권제도는 다수 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20. ( T / F )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담보취득하나, 담보취득 당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았다거나 건축 중인 상태여서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1. ( T / F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후 담보취득하거나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담보제공하기로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대출을 실행하기는 하나 후일 건물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지 못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담보가치는 그 만큼 증가하게 된다.

22.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후일 담보권실행시 법정지상권 성립에 따른 매매가 하락으로 대출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4절. 근저당권 : 6.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6-5. 주택임차권**

1. ( )임차권이란 주택(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타인 소유의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주택에 ( )을 설정(설정계약, 전세금지급 및 전세권등기)받거나 ( )(임대차 계약 및 차임지급)을 한다.

3. ( T / F ) 물권인 전세권과 달리 채권인 임차권은 임대인과 상대적인 관계에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임차주택을 양수한 제삼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 T / F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저당권 설정 등)의 자유를 가지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5. ( T / F )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 등의 담보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고, 이러한 보증금은 임차인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7가지는?

7. ( )이란 주택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내용을 임대인 이외에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8. ( T / F ) 민법상 임대차는 등기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9. ( T / F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10.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 )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긴다(제3조 제1항).

11. ( T / F ) 주택의 인도는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12. 주민등록은 ( )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지를 가지는 주민이 그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주소나 거소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3. ( T / F )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입지에서 최종적인 주민등록표의 정리 및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4. ( T / F )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삼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등기 대신 공시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지번)와 주민등록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15. ( T / F ) 대법원은 주택의 실제의 동표시와 불일치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6. ( T / F ) 임차인들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서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삼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17. ( )을/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이탈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8. ( T / F )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되면 채권가압류의 제삼채무자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19. ( T / F ) 임대차관계가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 ( T / F )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임차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21. ( T / F ) 임차인의 이러한 대항력은 취득시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경매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2. 주택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 )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 )으로 본다(제4조 제1항).

25. ( T / F )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은 2년 미만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6.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 )개월 전부터 ( )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보증금증액 등 조건변경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기간만료전 ( )월까지 갱신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1항).

27. ( T / F ) 임차인은 ( )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 )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철거나 재건축, 임대인 및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 등의 사유가 아니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8. ( T / F ) 임대인이 거절하지 않았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9.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 )년으로 본다.

30. ( T / F ) 2년 동안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31.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6조의 3).

32.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임대인이 임의반환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 )를 받을 수 있다.

3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경매 또는 공매의 환가대금 중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 )받는 소액보증금 ( )(제8조 제1항)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보증금 전액을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받는 ( )(제3조의2 제2항)을 부여하고 있다.

34. ( T / F )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을 취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며(제8조 제1항 후문), 주택가격(대지가격 포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5. ( T / F ) 소액보증금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항).



36.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 )을 신청할 수 있다.

37. ( T / F )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제3조의3 제1항, 제5항).

38. ( T / F )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일부)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39.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제2조).

40. ( T / F )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실지용도가 아닌 공부상 표시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

41. ( T / F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고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2. ( T / F )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간점에서 대법원은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하고 있다.

43. ( T / F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이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법인에게도 적용된다(제2항, 제3항).

44. ( T / F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택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45. ( T / F ) 외국인 등록신청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46. ( T / F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47. ( T / F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

48. 주택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 선 / 후 )순위인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절차 등의 배당금에서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난 후 남은 것이 있으면 배당을 받는다. 이 경우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 있고 / 없고 ) 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 있다 / 없다 ). 근저당권 설정보다 뒤에 대항력을 취득하여 부동산이 경매됨으로써 주택임차권도 소멸한다.

49. 주택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 선 / 후 )순위인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절차 등의 배당금에서 보증금 전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 우선한다 / 우선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대항력은 갖추었지만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에 받았다면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또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최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보증금 전액을 인수한다.

50. 근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보증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 있다 / 없다 ).

**4절. 근저당권 : 6.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6-6. 상가건물임차권**

1. ( T / F )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건물임대차도 주택임대차의 보호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2.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 )와 ( )이다.

3. ( T / F )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제5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 T / F ) 임대차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월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 상 표시와 일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은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5. ( T / F ) 상가건물은 객관적으로 독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6. ( T / F ) 상가건물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7. ( T / F ) 상가건물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목적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여야 한다.

8. ( T / F )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9. ( T / F )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도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

10. ( T / F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1. ( T / F )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2. ( T / F )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3.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 )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제3조 제1항).

14. ( T / F )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15. ( T / F ) 요건구비(대항력 및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동일하지 않다.



16. ( T / F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17. ( T / F ) 2019. 4. 2. 이후에는 서울특별시는 (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 )원 이하, 광역시 등은 (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 )원 이하에만 적용된다.

18. 상가건물이 보증금과 월 임차료(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 보증금 계산은 월차임에 ( 10 / 12 / 100 / 120 )을 곱한 후 그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여 산정하는데 이를 ( )보증금이라고 한다.

19. 2015. 5.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다음 사항은 임차보증금(또는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된다(제2조 제3항, 아래(3)항과 (4)항은 2013. 8. 13. 부터 시행되었다).

(1) ( )(상가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 취득시 제삼자에 대한 효력(제3조 제1항)  
(2) 임차건물의 양수인의 임대인의 ( )(제3조 제2항)  
(3)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1,2,3항), 법정갱신의 경우 ( 포함 / 제외 )  
(4) 계약갱신시 차임 및 보증금의 ( )청구권(제10조의2)  
(5) 권리금 ( )기회 보호에 관한 조항(제10조의3~7)  
(6) 차임연체액이 ( )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제10조의8)  
(7) ( )계약서의 작성(제19조)

20. 상가건물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차이점 세 가지는?

21.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 )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 )년으로 본다(제9조 제1항).

2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 )월부터 ( )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3. ( )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2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 )년(2018.10.16 개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느 ㄴ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제10조).

25. 상가건물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26. 상가건물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대인, 임차인, 근저당권설정자 등)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임대목적물, 임차인,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등), ( )을 취득한 내용(사업자등록신청일 등), ( )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4조).

27.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라면 담보취득하려는 상가건물 소유자(임대인)가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 )’을 확인해야 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 )’을 발급받아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28. ( T / F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에도 적용된다.

**4절. 근저당권 : 6.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6-7. 조세채권**

1.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참조)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법 제5조 참조) 및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공과금과 그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의 원칙 )

2. 이러한 ( )의 예외로서 국세(지방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3. 법정기일과 설정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 )가 우선한다.

4. ( )이란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그 신고일(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이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 확정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경우와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 발송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은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말한다.

5.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취득한 날로부터 ( )일이 되는 날(법정납부기한)이 법정기일이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징수하는 가산세의 경우는 ( )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6. 조세의 법정기일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부과된 조세 즉 당해 물건에 부과된 ( )세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 )세로는 국세 중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 분에 한한다)가 있다.

7. ( T / F )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물이 제삼자에게 양도/상속/증여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수증인에 대한 조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거나 그 조세가 당해세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설정금액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권이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보다 우선한다.

8. ( T / F ) 저당권설정 당시 저당권설정자의 체납된 조세가 없었다면(있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목적물이 양도된 후 조세채권과의 관계에서는 저당권자의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9. ( )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 T / F ) 공과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등이 있다. 이러한 공과금 등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질권이나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11. ( T / F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와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우에는 각 법률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는 국세나 지방세처럼 납부기한과 설정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4절. 근저당권 : 6.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6-8. 임금채권**

1. ( T / F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임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반임금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 )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변제권 )

3. ( T / F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제1항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단,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항에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 )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로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변제되는 임금우선변제권 중 최종 ( )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 ( )일부터 소급하여 ( )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6.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 )부터 소급하여 ( )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7. 최종 ( )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 )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8. ( T / F )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소액이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당권 자체가 담보로서의 실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9. ( )변제권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 )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 )’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상ㅇ자의 총재산을 의미힌다.

10. 사업주라 함은 개인기업에서는 그 기업주 ‘( )’을, 법인인 경우에는 ‘( )’을 의미한다.

11. ( T / F )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한다.

12. ( T / F ) 사용자의 부동산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후에는 임금채권자들이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전에 가압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 ( T / F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용자가 양수하더라도 그 사용자의 근로자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14. 저당권을 설정할 떄에는 담보제공자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는데 저당권 설정 후 사용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우선변제권과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종 ( )월분의 임금 채권 등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4절. 근저당권 : 7. 공장저당권 : 7-1. 공장저당권의 의의**

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 )이라 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가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제2조).

2. ( T / F ) 공장은 1필의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 또는 1동의 건물과 그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로 구성된다.

3. ( )은 공장을 목적물로 하여 담보제공자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기부 또는 건물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4절. 근저당권 : 7. 공장저당권 : 7-2. 공장저당권의 효력**

1. ( T / F ) 공장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효력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이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 물건 및 토지 또는 그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에 미친다(제3조, 제4조).

2. ( T / F ) 공장저당권이 일반저당권과 다른 점은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장공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 있다.

3. ( T / F ) 공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시 이러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제6조), 목록제출에 관한 사실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4. ( T / F )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이라도 목록제출로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 T / F ) 공장에 속하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의 목록을 제출하여 등기한 저당권이 여러 개일 경우 위 기계/기구 등에 미치는 저당권의 효력은 목록제출에 따른 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4절. 근저당권 : 7. 공장저당권 : 7-3.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유의사항**

1. ( T / F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삼자의 소유인 경우) 기계, 기구 등이 목록으로 제출되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 T / F ) 공장저당권자는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이 제삼자취득자에게 인도된 후라면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 T / F ) 제삼자가 그 동산을 인도한 사람이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취득(선의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7조).

4. ( T / F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로 목록제출하여 등기된 기꼐,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은 저당궈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5. ( T / F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은 공장인 토지 또는 건물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는 미치지 않는다(제8조)고 하여 그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다.

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및 기타 공장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 분할 / 일괄 )하여 경매해야 한다.

7. ( T / F )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통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후순위로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보통저당권자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면 그 토지 및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도 같이 경매해야 한다.

8. ( T / F ) 농지가 공장저당권의 일부인 경우에도 일괄경매 해야한다.

**4절. 주요내용 종합정리**

1. ( )이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그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2. ( T / F )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그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정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한다.

3. ( T / F ) 채권최고액에는 원금은 포함되며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 T / F ) 채권최고액에는 위약금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

5. ( T / F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부동산의 후순위권리자나 물상보증인 또는 제삼취득자와 같은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물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라도 최고액을 변제하는 것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6. 근저당권의 ( )이란 담보되는 채권이 증감/변동하는 것을 멈추고 채권의 원본이 확정되는 것이다.

7.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확정된 채권만을 담보하는 보통저당권으로 변한다.

8. ( T / F ) 근저당권이 확정되더라도 확정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채권은 담보하지 않는다.

9. ( T / F ) 근저당권이 확정되는 사유는 근저당권서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확정된다.

10. 제삼자가 근저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는 겨웅에는 매수인이 ( ) 시점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며,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해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 시점에 확정된다.

11. ( T / F )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근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고, 과실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까지 미친다.

12. ( T / F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설정자가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 청구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 근저당권자는 담보되는 채권의 변제가 없으면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 우선 /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을 경매신청한 경우 그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4. 공동근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만 경매신청을 하여 전액을 배당받아 간 경우, 경매진행이 안 된 공동근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경매하였더라면 공동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배당받았을 금액을 한도로 공동근저당권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후순위저당권자의 ( )이라고 한다.

15. ( T / F )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에 기한 권리와 경합하는 때에 물상보증인에게 우선할 수 있다.

16. ( )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규정에 따른 담보물권이다.

17. 유치권은 ( )유치권과 ( )유치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 )유치권은 유치하고 있는 물건과 채권이 서로 견련관계가 있을 때 성립하고, ( )유치권은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없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면 성립한다.

18. (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이전에 성립하면 근저당권설정 이후이더라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 )유치권은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성립해야만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19.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 )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약정을 맺을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 )이라고 한다.

20.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세 가지는?

21. 법적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담보가치는 그 만큼 ( 증가 / 감소 )한다.

22.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 )와 (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 )을 취득한다.

23. ( T / F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4. ( T / F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5. ( T / F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6. ( T / F )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27. ( T / F ) 주택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28. ( T / F )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 경매 또는 공매의 환가대금 중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29. ( T / F )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받는 ( )가 있다.

30. ( T / F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고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31. 대항력 취득요건은 ( )와 ( )이다.

32.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겨웅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소액보증금 ( )변재권, 확정일자 있는 ( )변제권 등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큰 차이가 없다.

33. ( T / F )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34. ( T / F ) 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조세의 법정기일애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부과된 조세 즉 당해 물건에 부과된 당해세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35. ( T / F )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물이 제삼자에게 양도/상속/증여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수증인에 대한 조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가나 그 조세가 당해세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설정금액 범위 내에서는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36. ( T / F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의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보상법상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따라서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37. ( T / F )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38. ( T / F ) 사용자의 부동산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후에는 임금채권자들이 임금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9. ( T / F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용자가 양수하면 그 사용자의 근로자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40. ( T / F ) 공장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효력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이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및 그 토지 또는 그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에 미친다.

41. ( T / F ) 공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기신청시 이러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2. ( T / F )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3. ( T / F ) 기계/기구 등에 미치는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의 선후가 아니고 목록제출에 따른 등기의 선후가 된다.

44. ( T / F ) 공장저당권의 목적물로 목록제출하여 등기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5. ( T / F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은 공장인 토지 또는 건물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무렝도 미친다.

46. ( T / F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및 기타 공장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경매하지 않아도 된다.

**47. ( T / F )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이용권은 설정자(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과실인 그 주택의 차임(월세)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은 후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8. 토지와 건물(예, 단독주택)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근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되지 않으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9. ( T / F ) 구분건물의 전유부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50. ( T / F ) A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증여되었다. 그 후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세무서는 을에 대한 증여세를 경매법원에 교부청구하였다. 이 경우 경매법원은 을에 대한 증여세를 당해세로서 A은행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할 것이다.**

**51. ( T / F )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는 목록등기가 되어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목록등기된 기계기구에 대한 우선 여부는 공장인 건물 또는 토지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순서에 따른다.**

**52. 다음 중 근저당권의 확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대출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2) 제삼자가 경매신청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다른 근저당권은 경매개시결정시에 확정된다.  
3)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4)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된다.**

**53. 다음 중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2) 민사유치권은 채권과 물건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근저당권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상사유치권은 견련성이 없더라도 채무자 소유이면 성립하나 근저당설정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54. 다음 중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저당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도 저당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는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하는데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채권자 등이 이미 압류를 하였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상금이 설정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이나 배당요구이다.**

**55. 주택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2)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신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 관한 것이므로 근린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4) 대항력 취득시기는 주택의 인도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새벽 0시이다.**

**56. 다음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금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채권이 아닌 것은?**

**1)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채권  
2)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3) 상가건물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인 소액보증금채권  
4)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1. 채무자관리 : 1-1. 채무자 교체**

1. ( )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인수에는 제삼자(인수인)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가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 )채무인수와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병존하여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 또는 )채무인수가 있다.

3. ( T / F )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와 인수인, 채무자와 인수인, 채권자와 채무자 및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4. (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채권 불성립, 동시이행 항변 등)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 있다 / 없다 ).

5. ( T / F )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민법 제459조).

6. ( T / F )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완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 채무자인 인수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담보하며, 그 후 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한다.

7. (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며,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도 그대로 존속하고 근보증이나 근저당의 경우 기존채무자에 대한 신규여신에 대하여도 효력을 계속 미친다.

8. ( T / F ) 면책적채무인수인에 대한 신규 여신에 대하여는 기존 근보증이나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9.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 )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 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계약이다.

10. ( T / F )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11. ( T / F )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로부터 계약인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 T / F ) 계약인수는 개별 채무에 대한 인수다.

13. ( T / F ) 계약인수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인수이기 때문에 기존채무자에 대한 개별 여신은 특약이 없는 한 인수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4. 채무인수와 계약인수는 채무자 ( 교체 / 변동 )이다.

15. ( T / F ) 은행이 사용하는 계약인수약정서에는 기존채무(인수당시의 개별채무)도 인수대상 채무로 정하고 있다.

16. ( T / F ) 보증인 및 담보제공자가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므로 기존 개별채무뿐만 아니라 인수인에 대한 신규여신에 대하여도 기존 근보증 및 근저당의 효력에 미친다.

17. 은행실무에서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매수인이 은행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 )인수나 ( )인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 )인수를 이용하면 인수인에 대한 새로운 대출도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게 도니다.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1. 채무자관리 : 1-2. 채무자 변동**

1.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가 ( 일반 / 법률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은 ( )으로 개시된다.

3. 상속인 및 상속순위는 (1)피상속인의 직계( ), (2)피상속인의 직계( ), (3)피상속인의 ( ), (4)피상속인의 ( )촌 이내의 ( )혈족이다.

4. ( T / F )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동친을 선순위로 하고 최근친 등의 상속인의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5. ( T / F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6. ( T / F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1), (2)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7. ( T / F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1), (2)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8.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 )이라고 한다.

9.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고(민법 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존속 상속분의 ( )할을 가산한다.

10. 상속인은 상속개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 )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11. ( )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제한 없이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12. ( )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13.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가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 )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 )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14. ( )는 상속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 )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15. 은행은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 사망사실(상속개시시점)과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여/수신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각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비율에 따른 금액에 대한 ( )통지를 한 후 ( )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6. ( T / F ) 상속인들이 여신 등의 계속 거래를 요청할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하여 특정 상속인에게는 채무승계를 시킴으로써 계속거래를 할 수 있다.

17. ( T / F )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청산절차에 적극 참가하여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해야 하고, 일부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전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법원에 선임신청하여 그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18.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영역 확대 또는 세제상의 이익을 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운영상의 권리/의무 주체가 법인이 되도록하는 경우, ( )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설립 후 개인기업을 동 법인에게 양도하는 ( ) 따른 법인전환과 개인사업주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 )에 따른 법인전환이 있다.

19. 기존 근저당권의 경우 개인대출은 담보가 되나 법인에 대한 신규대출은 담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 ) 계약으로 채무자 ( )를 해야 한다.

20. ( T / F ) 은행의 동의 없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영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회사설립무효(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인전환을 한 출자자 개인의 채무가 법인의 채무가 됨을 주장하여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1. 채무자관리 : 1-3. 회사 합병과 분할**

1. ( T / F ) 회사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고 계약으로 경제적/법률적으로 1개의 회사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 주주의 지위가 존속회사로 이전하는 ( )합병과 합병회사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 )합병이 있다.

3. 합병을 하는 회사는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 )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으로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 최고 해야 한다 / 최고하지 않아도 된다 ).

4. ( T / F )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 T / F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채권을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6. 합병하는 회사가 이러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합병등기 후 ( )개월 이내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29조).

7. ( T / F ) 은행으로서는 채무자회사의 합병으로 채무자의 자산 및 영업상황 악화가 예상되면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거나 합병포기 등을 유도할 수 있다.

8. ( T / F ) 회사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기 때문에 소멸되는 회사의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합병 당시 존재하는 소멸회사의 채무뿐만 아니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도 담보된다고 본다.

9.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삼자가 합병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 ) 시점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한 새로운 ( 채무도 담보한다 / 채무는 담보하지 않는다 ).

10. ( T / F ) 회사의 합병은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또는 신설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1. ( T / F ) 합병과 반대로 기존회사가 자본금과 부채를 나누어 2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을 회사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특정사업부문의 전문화 또는 적자사업 분리에 따른 경영효율화(기업구조조정)나 이익분산으로 절세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12. ( T / F ) 회사분할은 합병과 달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13. 회사분할은 ( )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14, ( T / F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내용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1. 채무자관리 : 1-4. 영업양도**

1. ( )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 T / F ) 양도대상이 되는 영업은 토지, 건물, 채권, 상표권 등의 적극재산이며 채무 등의 소극재산 및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 T / F ) 영업양도는 합병처럼 영업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당사자는 양도재산에 대하여 개별적 이전행위를 해야 한다.

4. ( T / F )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등기,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은 등록, 지명채권은 채무자(제삼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제삼채무자)의 승낙, 주식은 대체 전자등록 또는 주권의 교부(기명주식은 명의개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 T / F ) 영업을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경우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

6.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 )분의 ( ), 발행주식총수의 ( )분의 ( ) 이상의 찬성)를,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 의결권의 ( )분의 ( ), 총사권 과반수 이상 찬성)가 필요하다(상법 제372조 제1항, 제576조 제1항).

7. ( T / F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는 해산 후 영업양도는 총사원의 동의, 존립 중에 양도하는 경우(정관변경사항)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8. ( T / F )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이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채무인수를 광고할 때에는 영업상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양도인의 종전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은 변제할 책임이 없다.

9. ( T / F ) 은행 실무에서 은행과 채무자의 영업양도에 관한 사전협의를 동의할 경우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있으면 이들의 동의와 근저당권변경계약에 따른 채무자 변경등기도 해야 한다.

10. ( T / F ) 은행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거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 청구와 이행청구 및 담보권실행 등의 법적조치에 착수하고,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채무인수 광고시에는 양수인에게도 변제청구를 할 수 있다.

11. ( T / F ) 양도인의 영업양도대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12. ( T / F ) 채무면탈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지급(처분)금지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채권자취소의 소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1. 채무자관리 : 1-5. 법인(회사)의 해산**

1. ( T / F ) 회사가 그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회사의 해산이라고 한다.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고 이로써 곧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2. ( ) 때 법인격이 소멸한다.

3. ( T / F ) 회사는 해산 후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이 있다.

4. 회사가 해산하는 사유는?

5. ( T / F ) 회사가 그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회사의 파산이라고 한다.

6. ( )이란 회사가 해산 후 채권 등을 추심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가 있으면 주주(사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 법인격이 소멸되고, ( )를 하게 된다.

8.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청산인은 ( )를 신청해야 한다.

9. ( T / F ) 청산이란 회사(법인)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재무초과’ 상태이다.

10. ( T / F ) 이사나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이 있으면 법인은 1개월 뒤에 해산되고, 이때부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11. 은행은 채무자인 회사가 ( )을 하는 경우 당연기한이익상실사유로서 즉시 채권회수절차를 취해야 하고, 예금에 대한 상계실시 및 청산절차나 파산절차 등에 참가하여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12. ( T / F ) 청산이나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기존의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 등의 담보에 대한 권리에도 영향이 있다.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2. 채권자변경(대출채권의 양도)**

1. ( T / F ) 은행의 정상적인 대출금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자주 일어난다.

2. 채권자를 변경하는 방법에는 개별 채권을 양도하는 ( )와 채권자 지위를 양도하는 ( )가 있다.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2. 채권자변경(대출채권의 양도) : 2-1. 채권양도**

1. ( T / F ) 채권양도란 채권자의 지위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인(구 채권자)과 양수인(신 채권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2. ( T / F ) 대출채권은 특정인이 채권자로 되어 있는 지명채권으로서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법률 규정으로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채권양도는 ( )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권리가 이전된다.

4. ( T / F ) 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신 채권자(양수인)가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 T / F ) 신 채권자가 채무자 외의 제삼자에게 양도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

6. ( T / F ) 채무자가 승낙을 하면서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 통지와 효력이 동일하나, 채무자가 구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권은 존속하지 않는다.

7. ( T / F ) 대출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담보제공자나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8. ( T / F ) 대출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담보나 보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2. 채권자변경(대출채권의 양도) : 2-2. 계약양도**

1. ( T / F ) 계약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채권자와 신 채권자 간의 계약을 말한다.

2. 특정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 )인수를 이용하고, 채무자의 지위이전은 ( )인수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특정채권의 양도는 ( )양도로 하고, 채권자 지위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 )양도를 이용한다.

3. ( T / F ) 계약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채무자의 3면계약으로 하고, 채권자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는 계약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4. ( T / F ) 계약양도는 채권자의 지위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담보나 보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 T / F ) 계약양도는 채권자변경에 따른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6. ( T / F ) 계약양도는 근담보나 근보증의 경우에 담보제공자나 근보증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7. ( T / F )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자를 변경하면 변경된 채권자에 대한 신규대출금도 근저당권으로 담보한다.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3. 대출채권의 보전 및 시효관리 : 3-1. 보전처분(가압류 및 가처분)**

1. ( )는 금전채권에 기한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에 할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다.

2. ( T / F )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보전의 필요성)에 할 수 있다.

3. 가압류명령의 신청으로 기재해야 할 것들은?

4. ( T / F ) 가압류신청은 ( 구두로 / 서면으로 )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대여금청구소송 등)의 관할법원 및 대법원에 신청한다.

5. 가압류 신청시에는 본안소송에서 청구할 ( )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 )채권으로 하여 신청해야 한다.

6. ( T / F ) 가압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이 적정한지 여부,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보전 필요성 등을 심리(채권자가 첨부한 소명자료 외 변론 필요)한 후 결정으로 재판한다.

7. ( T / F )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집행되지 않는 동안에도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긴다.

8. 가압류 명령 효력 시기는?

9.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이 채권자에게 고지되거나 송달된 날로부터 ( )일을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므로 ( )일 내에 집행에 착수해야 한다.

10. ( T / F ) 유체동산의 집행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할 때에는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고 채권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11. ( T / F )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으로 집행한다.

12. ( T / F ) 등기부기입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의 판사가 등기촉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3. ( T / F )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을 제삼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이 제삼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집행이 완료된다.

14. ( T / F ) 어음, 수표, 주식 등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은 유체동산 집행밥업에 따라 증권을 집행관이 점유해야 하고, 배서가 금지된 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집행방법에 따라 채권자가 증권을 점유해야 한다.

15. ( T / F ) 실무에서는 이러한 증권적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점유하고 있다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가 증권 점유사실을 부인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16.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매매, 증여,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르 할 수 없는 ( )효력이 생긴다.

17. ( T / F ) 처분금지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명령 신청시 보전하고자 한 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18. ( T / F ) 주관적 범위(가압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를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할 수 없게 되는지 관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기 전에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으로 이미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새로이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을 하려는 채권자까지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19. ( T / F ) 채무자는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신처의 당부를 재심사해 달라고 가압류를 한 법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0. ( T / F )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하는 결정으로 한다.

21. ( T / F )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2. ( T / F ) 채무자는 가압류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신청을 할 수 없다.

23.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 )주 이상) 이내에 본안의 소(대여금청구, 지급명령신청 등)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

24. ( T / F ) 위 기간 이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25. ( T / F )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이 있은 후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에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26. 채권자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 )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27. ( )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28. 가처분은 당사자 간 거래가 원만치 않아서 채권자가 자기가 획득한 권리를 실현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등)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인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 )을 받더라도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29. 가처분 명령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또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우려된다는 가처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3. 대출채권의 보전 및 시효관리 : 3-2.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구득**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출시 취득한 담보가 있으면 담보권을 실행(꼉매신청 등)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힘을 빌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채무자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의 조치 후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가 ( )과 ( )이다.

3. ( )란 금전 등의 청구에 관한 ( 일반 / 특별 )소송절차로서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에서 ( )를 거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한다.

5.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한다.

6. 채무자가 ( )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7. ( T / F ) 이 경우 채권자는 인지 및 송달료 등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8. ( T / F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송달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이나 외국송달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9. ( T / F ) 채권자는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곧바로 금전청구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10. ( T / F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1. 채권자인 은행이 원고가 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빌려준 돈을 갚아라는 판결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 )이다.

12. ( T / F ) 소송은 원고가 채권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13. ( T / F )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고 피고가 원고 주장에 대한 항변 등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진행된다.

14. ( T / F ) 판결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하면 판결은 확정되고 소송은 끝나게 된다.

15. ( T / F ) 대법원에서 하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배하였는가의 여부와 사실문제에 대하여 심리한다.

16. ‘돈을 갚아라’라고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데 이러한 집행력이 인정된 판결을 ( )이라고 한다.

17. 집행권원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이 대표적이지만 판결 외에도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 등이 작성한 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는 ( )증서와 재판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회상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등이 있다.

18. ( T / F )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다.

19.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 )원 이하인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를 ( )이라고 한다.

20.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 소액사건처리제도로서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21. ( T / F )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22. ( T / F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3. 대출채권의 보전 및 시효관리 : 3-3. 채권시효관리**

1. ( )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맞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다. 권리가 소멸되는 ( )와 권리를 취득하는 ( )가 있다.

2. ( )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의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3. 은행에서 대출 후 변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 )년이 지나면 대출금채권은 효력이 없어지는데 이것이 ( )의 한 예이다.





4. ( T / F )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진행되지 않는다.

5. ( T / F ) 시효가 중단되면 그동안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소멸된다.

6. ( T / F )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시작된 때로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7.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 5가지 예 )을 들고 있다.

8. ( )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유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청구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하는 파산절차참가, 민사상 다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화해를 위한 소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인 ( )가 있다.

9.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화해를 신청한 때, 채권자의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각각의 ( ) 효과가 생긴다.

10. 화해를 신청하여 화해가 불성립한 때에는 ( )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최고를 한 경우에는 ( )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11. ( )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위해 집행기관이 판결 등(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이다.

12. ( )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13. ( )은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 )에 대한 ( )’과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 )를 위한 ( )’이 있는데 이러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4. 채무의 ( )이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 T / F ) 승인은 채무자로부터 채무승인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16. ( T / F )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행위도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17. ( T / F )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18.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될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없어지고 중단사유가 ( 시작 / 종류 )한 때로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19. ( T / F )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미친다.

20. ( T / F ) 승계인은 포괄승계인을 포함하며 특정승계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21. ( T / F ) 승계는 중단사유가 발생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2. ( T / F )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을 압류(경매)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23. ( T / F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나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 미친다.

24. ( T / F ) 보증인이 있는 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주채무자에 대하여만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25.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시효가 ( )년으로 연장되더라도 소송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게는 판결( )일로부터 상사채권 시효기간인 ( )년간만 시효가 연장된다.

26. ( )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절대적소멸설)와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그 권리 소멸을 주장할 때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는 견해(상대적소멸설)가 있다.

27. ( T / F ) 판례는 시효가 완성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상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 재판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28. ( T / F )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29. ( T / F )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3. 대출채권의 보전 및 시효관리 : 3-4. 채권자취소권**

1.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시키거나 소멸시킴으로써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무자룍(또는 채무초과)이 될 경우 채권자는 그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 )이라 한다.

2. ( T / F )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3. ( T / F )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있어야 한다.

4. ( T / F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고 불이익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하였을 것과, 채무자 및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악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하였을 것(사해의사)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채권자를 ( )는 말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그 결과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6. ( T / F ) 채무면제와 같이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포함되며 부채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7. 채무자의 ( )라는 것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8. ( T / F ) 채무자의 악의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9. ( T / F ) 통상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악의가 추정된다.

10. 채무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은 자를 ( )라고 하고, ( )로부터 다시 재산권을 이전받은 자를 ( )라고 하는데 이들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11. 수익자와 전득자는 본인들이 선의라는 사실(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들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한다.

12.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 )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13. 제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 작기 / 크기 ) 때문에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에서 둔 ( )소멸기간이다.

14. ( T / F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재산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이다,

15. ( T / F ) 그 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16.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를 반환해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으로 한다.

17. ( T / F )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18. ( T / F )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반환시킨 재산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되어 총채권의 공동담보가 되고,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 또는 변제충당할 수 있다.

19. 취소채권자가 취소권행사로 도로 찾은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으려면 ( )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자가 ( )해야 한다.

20. ( )의 경우에는 취소채권자가 이행의 상대방이 되어 ( )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21.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판례

1) 채무의 본지(내용)에 따라 변제한 경우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한 경우  
3)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제공을 한 경우  
4) 채무자가 사해행위 후 자력을 회복한 경우  
5) 채무자가 본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7) 상속포기(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8) 주택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9)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10) 명의신탁의 사해행위성  
11) 채무자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성

**5절. 대출채권과 담보의 보전 및 관리 : 3. 대출채권의 보전 및 시효관리 : 3-5. 채권자대위권**

1. ( )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 A가 B에게 받을 금전채권이 있고 그 금전채권은 머지않아 시효가 도래되어 소멸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은행에게 A의 금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A의 책임재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 )제도이다.

3. ( T / F ) 본래 민사집행을 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 이에 기하여 채무자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4. ( T / F ) 채권자대위권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 T / F ) 채권자대위권은 법원의 압류절차가 필요하다.

6. ( T / F ) 채권자대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이후에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7. ( T / F ) 본래 권리는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는 것이고 제삼자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8.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은?

1) ( T / F )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2) ( T / F ) 채권자의 채권은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대위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겨 채무자가 무자력(채무초과)이 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 T / F )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여야 한다.  
4) ( T / F )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으면 안 된다.  
5) ( T / F ) 채권자의 채권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 T / F )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효진행을 중단시키거나, 보존등기를 하거나, 제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등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로서 기한도래 전이라도 대위권행사가 가능하다.

9.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데 관련 있는 권리는 대위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라고 보고 있으나, 가족법상 권리인 신분권(부양청구권,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등)이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관련된 인격권 등 일신전속권은 대위 대상이 될 수 없다.

10.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연금청구권 등)은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1. ( T / F )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12. ( T / F ) 대위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가 없다.

13. ( T / F ) 실제로 대위권은 많은 경우 재판상 행사되고 있다.

14. ( T / F )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15. ( T / F ) 채권자는 재삼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것은 채무자에게 변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16. ( T / F )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채무자의 재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효과는 채권자에게 생긴다.

17. ( T / F )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보존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채무자에게 통지(또는 소송고지)를 해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8. ( T / F )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어떤 사유로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는 미친다.

19. ( T / F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20. ( T / F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권자에게 생긴다.

**5절. 주요내용 종합정리**

1. ( )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제삼자(인수인)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 )인수와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병존하여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 )인수가 있다.

3. (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 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계약으로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다.

4. ( T / F ) 회사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고 계약으로 경제적/법률적으로 1개의 회사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5. ( T / F ) 은행으로서 채무자회사의 합병으로 채무자의 자산 및 영업상황 악화가 예상되면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거나 합병포기 등을 유도할 수 있다.

6. ( )란 일정한 영업목적으로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7. ( )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채권자와 신 채권자 간의 계약을 말한다.

8. ( T / F ) 채권양도는 양도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9. ( T / F ) 채권양도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10. ( T / F ) 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구 채권자(양도인)가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

11. 신 채권자가 채무자 외의 제삼자에게도 양도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통지나 승낙을 ( )는 증서로 해야 한다.

12. ( )양도란 채권자의 지위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인(구 채권자)과 양수인(신 채권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13. 특정채권의 양도는 ( )양도로 하고, 채권자 지위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 )양도를 이용한다.

14. ( T / F ) 가처분은 금전채권에 기한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에 할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다.

15. 가압류명령의 신청은 ( )으로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인의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

16.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이 채권자에게 고지되거나 송달된 날로부터 ( )일을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17. ( T / F ) 집행되지 않은 가압류명령은 효력이 있다.

18. ( T / F )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매매, 증여,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처분금지효력이 생긴다.

19. ( T / F ) 채무자는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0. ( T / F ) 가압류명령이 있은 후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채권자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1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21. ( T / F ) 가압류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사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22. ( T / F ) 가처분 명령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우려된다면 가처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23. ( T / F ) 독촉절차란 금전 등의 청구에 관한 일반소송절차로서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24. ( T / F )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시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25. ( T / F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6. ( T / F )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이 대표적이지만 판결 외에도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와 재판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등이 있다.

27.. ( )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의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28. ( T / F )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라는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진행된다.

29. ( T / F )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효진행은 중단되고, 중단사유가 종료되면 그때로부터 시효는 새로이 진행된다.

30. ( T / F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 )가 있다.

31.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시키거나 소멸시킴으로써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무자력(채무조과)이 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행위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 )이라 한다.

32. ( T / F )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33. ( T / F )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있어야 한다.

34. ( T / F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되고 불이익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하였을 것과, 채무자 및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악의)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사해의사)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5. ( T / F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36. 사행위의 최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를 반환해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으로 한다.

37.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 )라고 한다.

38. ( T / F ) 채권자대위권을 하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 이에 기하여 채무자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39. ( T / F ) 채권자대위권은 법원의 압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40. ( T / F ) 채권자대위는 채권자대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이후에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1. ( T / F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42. ( T / F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은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3.. ( T / F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44. ( T / F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으면 안된다.

45. ( T / F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46. 채권자대위원 행사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데 관련 있는 권리가 ( )의 대상이 된다.

47. 채권자는 제삼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제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것은 채무자에게 변제한 것과 ( 같다 / 다르다 ).

**48. 면책적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변경의 경우 인수인에 대한 새로운 대출금은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49.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나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50.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것이어야 한다.  
3)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채무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은 수익자의 악의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51. 다음 중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  
2)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  
4) 가집행문이 부여된 제1심판결**

**52. 가압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가압류는 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2)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채무자는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삼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이 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유체동산의 집행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해야 하나 운반이 곤란할 때에는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53. 다음 중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2)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이지만 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0년이다.  
3)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다.  
4) 보증인을 제외하고 주채무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부종성에 의해 보증인에게도 10년의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6절. 채권의 회수 : 1. 변제 : 1-1. 의의**

1.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고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는 행위를 ( )라고 한다.

2. ( T / F )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제이다.

3.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다른 내용으로 대신 이행하는 ( )변제,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탁하는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이행 대신 채권자에 대한 상계의사표시로서 이행하는 ( ) 등도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4. 채무이행은 아니지만 이행과 같이 다루어지는 것으로서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시킴으로써 새로운 채무로 만드는 동시에 기존채무를 소멸시키는 ( ),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귀속하여 채권이 소멸하는 ( ) 등이 있다.

**6절. 채권의 회수 : 1. 변제 : 1-2. 변제에 관한 기준**

1. ( T / F ) 채무를 이행해야 할 장소를 말하며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지나,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현 주소지 또는 거래한 영업소가 된다(지참채무의 원칙).

2. ( T / F ) 어음의 경우는 어음채권자의 주소지나 영업지가 변제의 장소가 된다.

3. ( T / F )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변제의 장소를 거래의 영업점으로 하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 변제장소가 된다.

4. ( T / F ) 채무를 갚아야 할 시기, 즉 이행기를 ( )라 한다.

5. ( T / F )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베상해야 한다.

6. ( T / F ) 은행의 경우 기한전상환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고 있다. 이를 ( )라고 한다.

7. ( T / F ) 금전채무의 변제는 통화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다.

8. ( T / F )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으로 하는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고 자기앞수표로 하는 변제의 경우 교환에 회부한 후 결제된 때에 비로소 유효한 변제가 된다.

9. ( T / F )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율로 외화로 변제하며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없다.

10. ( T / F ) 여기서 ‘지급할 때’란 현실로 이행할 때가 아닌 약정상의 이행기다.

11. ( T / F ) 채권자와 그 대리인이 원칙적으로 정당한 변제수령권자이다.

12. ( T / F ) 채권이 제삼자로부터 압류/가압류되거나 채권자가 그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그 대항요건(제삼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있는 통지 또는 제삼채무자의 승낙)을 갖춘 경우에는 제삼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여도 가압류권자나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3.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 )이 수령권자이다.

14. ( T / F )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유효한 변제가 된다.

15. ( T / F ) 어음/수표 등 증권적채권의 증서(증권) 소지인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는 변제자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채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것)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호하게 된다.

16. 채권의 ( )란 채권증서와 거래인감을 소지한 것과 같이 사실상 채권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그 채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 )란 변제의 수령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한자를 말한다.

18. ( T / F ) 변제자는 변제수령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절. 채권의 회수 : 1. 변제 : 1-3. 변제충당**

1.. ( )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로써 제공한 것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그 변제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여러 채무에 순차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충당은 1차적으로 변제자(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고,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변제수령자인 은행이 지정할 수 있다.

3. 변제수령자의 충당권 행사에서 변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변제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 )에 따른다.

4. ( T / F ) 법정충당은 당사자 모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거나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배당요구채권에 전부 충당할 수 없으면 적용되지 못한다.

5. 법정충당 순서는 (1)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 )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2)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 많은 / 적은 )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3)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4)전 (2)항과 (3)항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 비례 / 반비례 )하여 각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 T / F ) 민법상 변제충당 내용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7. ( T / F ) 은행은 별도의 충당방법을 특약으로 맺고 있다.

8. ( T / F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는 (1)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상계 등의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충당하되 은행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9. ( T / F ) (2)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르며, (3)위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 회수금으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하지만, 은행은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의를 하고 담보/보증 등을 감안, 충당채무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한다.

10. ( T / F ) (4)은행이 위 항에 따른 충당순서를 법정변제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 ( T / F ) 이러한 변제충당 특약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12. ( T / F ) 특약에 따른 변제충당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제삼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과 지정충당 순서에 따라야 한다.

13. ( T / F )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요구한 채권에 충당해야 한다.

14. ( T / F ) 배당금으로 배당요구채권 모두를 변제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정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해야 한다.

**6절. 채권의 회수 : 1. 변제 : 1-4. 변제의 효과**

1. ( T / F ) 변제는 채무내용에 좋은 현실제공이 원칙이다.

2. ( T / F )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제공이 가능하다.

3. ( T / F ) 변제제공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6절. 채권의 회수 : 1. 변제 : 1-5. 제삼자의 변제**

1. ( T / F ) 채무는 제삼자도 변제할 수 있다.

2. ( T / F ) 채무의 성질 또는 상자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도 변제할 수 있다.

3. ( T / F )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4. ( )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5. ( T / F ) 이해관계에 있는 제삼자에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저당목적물의 제삼취득자 또는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 T / F ) 이해관계에 있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7. ( T / F ) 제삼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채무가 소멸한다.

8. 변제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 )이라고 한다.

9. 주채무자의 ( 부탁을 받아 / 부탁 없이 ) 보증한 사람이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한 금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 부탁을 받아 / 부탁 없이 )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변제 당시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으면,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한 자는 ( )의 한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

10. ( T / F )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부탁받은 보증인의 경우와 같이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11.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관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데 이를 ( )라고 한다.

12. ( T / F ) 대위변제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에 관한 권리는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등이 있으며, 담보에 관한 권리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를 모두 포함한다.

13. ( T / F ) 채권자가 가압류한 권리는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4. ( T / F )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 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15. ( T / F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보증인의 재산을 가압류 한 경우에 그 피보전관리(가압류한 채권)를 대위변제한 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16. ( T / F ) 채권자는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에게 그 대위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채권에 관한 증서나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을 교부해야 하고, 전부를 대위변제한 자에게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의 뜻을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7. ( T / F ) 채권자는 모든 법정대위권자를 위하여 담보보존의무를 부담한다.

18. ( T / F ) 법정대위권자가 잇을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법정대위권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19. ( T / F ) 보증인이 여러 명이거나 담보제공자가 여럿일 경우 그 일부의 면제 또는 포기 등을 할 경우에 다른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 ( T / F ) 은행거래에 있어서 동등한 자력이 있는 자로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물 교체할 경우 다른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보증서,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두고 있으나 동등한 자력이나 가치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6절. 채권의 회수 : 2. 상계 : 2-1. 의의**

1. ( )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예: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느 한 쪽의 의사표시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계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 )채권,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 )채권이라고 한다.

3. ( T / F ) 상계는 따로따로 변제하는 것보다 노력/시간/비용이 절약되므로 채무의 간편한 결제방법으로 이용되지만, 채권담보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6절. 채권의 회수 : 2. 상계 : 2-2. 상계의 요건**

1. 상계를 하려면 양 채권이 서로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 )이라 한다.

2. 상계적상은 상계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3. 상계의 요건 4가지는?

1) 양 채권이 서로 ( 동등 / 대립 )하고 있을 것  
2) ( 동종 / 타종 )의 목적을 가진 채권일 것  
3)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하였을 것 / 하지 않았을 것 )  
4) 상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닐 것

4. 양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1) ( T / F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2) ( 자동 / 수동 )채권은 상계하려는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어야 하고 그 상대방 채권은 상계하려는 자에 대한 채권이어야 한다.

5. 동종의 목적을 가진 채권일 때,

1) ( T / F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금전채권이거나 또는 동종 목적을 가진 종류채권(쌀 1가마 등 어느 종류의 물건 일정량을 인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6.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때,

1) ( T / F ) 상계를 하려는 자의 채권(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나, 자동채권은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상계할 수 있다.  
2) ( T / F ) 상계하려는 채권자(수동채권의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3) ( T / F ) 은행의 경우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제삼자의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에 채무자는 대출금을 바로 갚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상실 특약이 있어 채무자 예금 등에 가압류나 압류 등이 있을 경우 대출금(자동채권)과 예금을 상계할 수 없다.

7. 상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닐 것

1) ( T / F )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계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거나, 법률에서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2) ( T / F )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상계할 수 있다.  
3) ( )이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경우 이를 저지하여 자기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로는 최고/검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등이 있다.

**6절. 채권의 회수 : 2. 상계 : 2-3. 상계의 금지**

1. 상계의 금지에는 ( )에 따른 상계금지와 ( )에 따른 상계금지가 있다.

2. ( )에 따른 상계금지는 당사자가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3. ( T / F ) 상계금지 사실을 모르고 채권을 양수한 자나 채무를 인수한 자는 상계를 할 수 있다.

4. ( T / F )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채권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5. ( T / F )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 폭행을 가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자신이 갚아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

6. ( T / F )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현실로 배상을 받게 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7. ( T / F )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인 경우와 피해자인 채무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

8. ( T / F ) 채권이 압류되지 못할 경우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9.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은?

1) ( T / F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 T / F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 T / F ) 병사의 급료  
4) ( T / F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 ( T / F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 T / F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 T / F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은 제외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 T / F ) 채무자의 3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 T / F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규정된 채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등 특별법상 규정된 압류금지 채권(근로기분법 제89조의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 형사보상법 제22조의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지 않는다.

11. ( T / F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대여금과는 상계하지 못하고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12. ( T / F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급여를 받을 권리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채권도 전액 양도금지 채권이므로, 압류 및 상계금지 채권에 해당한다.

13. ( T / F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14. ( T / F ) 회사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상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범위가 아닌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등은 상계가 가능하다.

15. ( T / F ) 상계금지는 임금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임금채권자가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가능하다.

16. ( T / F ) 법원으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 등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후 취득한 채권으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거래처 A가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한 후 A의 채권자가 은행을 제삼채무자로 하여 A의 정기예금을 가압류한 경우, 은행으로서는 가압류명령이 은행에 도달(가압류명령의 효력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대출채권이 있으면 상계가 불가능하나 가압류명령이 도달한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6절. 채권의 회수 : 2. 상계 : 2-4. 상계의 방법**

1. 상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여기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 상계를 한다는 내용의 ( )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3. ( T / F ) 상계통지의 방법은 구두로는 불가능하며 은행의 경우 약관에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4. ( T / F ) 상계통지는 상계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해야한다.

5. 상계통지의 상대방은 상계시점에서 ( )에 있는 자동채권의 채무자(수동채권의 채권자)이다.

6. ( T / F ) 상계할 예금(수동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하나, 은행예금과 같이 양도금지나 양도시 사전에 동의 또는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양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7. ( T / F ) 실무상으로 양자 모두에게 상계통지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8. 질권설정의 경우 통지의 상대방은 ( )이나 이 경우에도 질권자에게 통지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채무자 및 제삼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 )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되기 전에는 ( 집행채권자(전부권자) / 집행채무자(예금주) )가, 확정된 후에는 ( 집행채권자(전부권자) / 집행채무자(예금주) )가 통지의 상대방이다.

10. ( T / F ) 추심명령의 경우와 압류/가압류의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예금주)가 통지의 상대방이다.

11. ( T / F ) 예금주가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12. ( T / F ) 상계는 소급효가 있다.

13. ( T / F ) 상계를 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

14. ( T / F )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해야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기 때문에(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언제 상계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

15. ( T / F ) 통상적인 우편일수를 감안하여 상계를 실행해야 한다.

16. ( T / F )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대동액으로 소멸한다.

17. 상계는 각 채무자가 상계를 할 수 있는 때, 즉 ( )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6절. 채권의 회수 : 3. 경매(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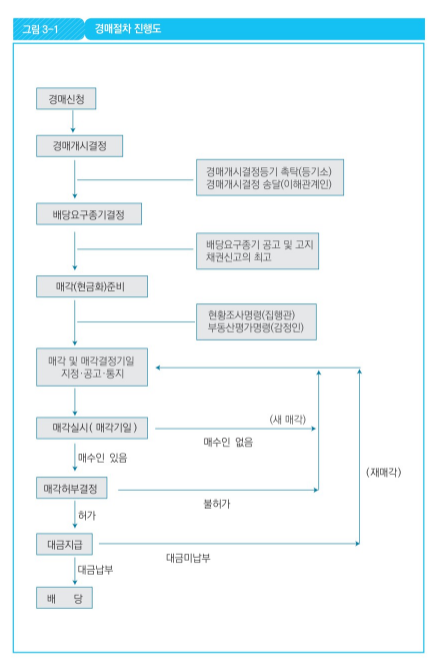
1. 경매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일반재산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 )경매와 집행권원이 없이 질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담보물을 매각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 )경매로 나눈다.

2. ( T / F ) 은행은 대출금이 기일에 변제되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다.

3. ( T / F ) 은행은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한 후 소송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임의경매를 통하여 마련된 매각대금을 배당받아 채권을 회수한다.

4. ( T / F ) 임의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절차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5. 경매절차는?



**6절. 채권의 회수 : 3. 경매(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3-1. 경매신청**

1. ( T / F ) 경매신청은 소정의 경매신청서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 T / F ) 경매신청서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와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경매에 필요한 비용(감정료, 신문공고료, 부동산현황조사료, 매각구구료 등)을 후납해야 한다.

**6절. 채권의 회수 : 3. 경매(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3-2. 경매개시결정**

1. ( T / F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때에 부동산을 압류하는 효력이 있다.

2. ( T / F )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소유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상대적효력),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생성된다.

3. ( T / F ) 경매개시결정 효력발생 이후에는 유치권이 성립하거나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자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대출금채권보다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4. ( T / F )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며(채무자, 소유자, 채권자 등), 부동산 소유자(강제경매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5. ( T / F ) 송달방법은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송달신청,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신청, 공시송달 신청 등으로 진행한다.

**6절. 채권의 회수 : 3. 경매(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3-3. 배당요구종기결정 공고 및 고지**

1. ( )는 경매개시결정일부터 약 ( )개월 ( 전 / 후 )로 정하며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하여 공고해야 하고, 이해관계인(배당요구 채권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2. ( T / F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나 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채권자들(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 임금채권자, 조세공과금 등의 주관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3. 법원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가압류권자, 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자, 조세채권 등의 주관 공공기관 등)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한다.

**6절. 채권의 회수 : 3. 경매(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3-4. 매각(현금화) 준비절차**

1. ( 최고 / 최저 )매각가격 결정

2.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최저금액은 집행법원이 감정인의 매각부동산 평가액을 참작하여 정하고(법원사정가격),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없어 새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에 ( )%~( )% 낮추어 최저매각가격을 다시 정한다.

3. ( T / F ) 집행관은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매각조건결정, 원매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4. 매각( ) 등의 작성 및 사본비치

5. ( T / F ) 부동산표시, 부동산 점유자 및 점유권원과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부동산상의 권리관계 등을 적은 명세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 등과 같이 법원에 비치해야 한다.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어도 위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복사할 수 없다.

**6절. 채권의 회수 : 3. 경매(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3-5. 매각절차**

1. 법원은 ( )일과 ( )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지정된 매각기일에 서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 )입찰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수시로 서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 )입찰, 그리고 지정된 기일에 구두로 입찰에 참가하는 ( )경매가 있으나 부동산 경매실무에서는 ( )입찰을 이용하고 있다.

3. 입찰참가자는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최저매각가격의 ( )분의 ( )을 납부해야 하고(실무상 재매각에서는 ( )분의 ( )를 납부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결정한다.

4. ( T / F ) 차순위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대금을 납부하게 한다.

5. ( T / F ) 차순위매수신고는 차순위매수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넘은 때에만 할 수 있다.

6. ( T / F ) 최고가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7. ( )은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거나 매각불허가결정 등으로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새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매각을 말하며, ( )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전 매각조건으로 다시 하는 매각을 말한다.

8. 재매각은 재매각기일 ( )일 전까지 매수인이 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납부하면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9. ( T / F )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과 감정인 및 참여사무관, 전 매수인 등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10. ( T / F ) 경매부동산의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저매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11. ( T / F ) 여러 필지가 경매될 경우 일괄매각이 원칙이다.

12. ( T / F ) 일괄매각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나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 법률규정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괄매각을 할 수도 있다.

**6절. 채권의 회수 : 3. 경매(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3-6. 대금지급절차**

1.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 )개월 이내에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납부를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 ( T / F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매각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유지된다.

3. 채무자 등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낸 뒤 ( )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6절. 채권의 회수 : 3. 경매(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3-7. 배당절차**

1.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선행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 )을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 ) 채권자와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 ) 및 체납처분에 의한 ( )이다.

2.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 등)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 전 / 후 )에 ( )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 )이 있는 채권자(주택 및 상가건물 임차인, 임금채권자, 조세 및 기타 공과금채권)이다.

3. ( T / F ) 법원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각 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해야 한다.

4. ( T / F ) 법원은 배당기일의 ( )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해야 하며,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해야 한다.

5. ( T / F )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이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고,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할 수 있으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는 이의가 불가능하다.

6. ( T / F )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 등)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경우에는 ( )이의의 소를, 집행권원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 )이의의 소를 배당기일로부터 ( )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7. ( T / F )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제기 후 ( )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래의 배당표대로 배당이 확정된다.

8. ( T / F )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3장. 여신담보 및 관리 주요내용 종합정리**

1. ( )란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고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제 외 채권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3. ( T / F ) 채무이행으로 이행과 같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경개, 면제, 혼동 등이 있다.

4. ( T / F ) 변제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무자 주소지에서 해야한다.

5. ( T / F ) 변제는 채권자와 그 대리인이 변제수령권자이나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수령권자다.

6. ( T / F )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유효한 변제가 된다.

7.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것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그 변제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여러 채무에 순차로 충당하는 것을 ( )충당이라고 하는데 ( )충당과 ( )충당이 있다.

8. ( T / F ) 법정충당은 1차적으로 변제자(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고,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변제수령자인 은행이 지정할 수 있다.

9. ( T / F ) 지정충당은 당사자 모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거나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배당요구채권에 전부 충당할 수 ( 있는 / 없는 ) 경우에 적용된다.

10. ( T / F ) 은행은 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지 않다.

11. ( T / F ) 변제는 채무내용에 좋은 현실제공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제공도 가능하다.

12. ( T / F ) 보증인, 물상보증인, 저당목적물의 제삼취득자 등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로서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13. ( T / F ) 제삼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하며,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14. ( T / F ) 채권자는 모든 법정대위권자를 위하여 담보보존의무를 부담한다.

15. ( T / F )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법정대위권자는 그 상실 도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16. ( )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느 한 쪽의 의사표시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 T / F ) 상계는 따로따로 변제하는 것보다 노력/시간/비용이 절약되므로 채무의 간편한 결제방법으로 이용되지만, 채권담보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18. ( T / F ) 상계를 하려면 양 채권이 서로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이어야 한다.

19. ( T / F ) 상계적상은 양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야 하고, 동 ( 책기준285쪽)

**4장. 자금세탁방지**